

제288회國會 (臨時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3月29日(月)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김용구 위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서민 살리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 대기업과 가진 자의 위기 탈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1)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은 경제정책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대기업과 가진 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2월 23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2년 동안 경제정책 최대 수혜층은 대기업과 부유층이라는 응답이 73%나 된 데 반해 서민과 빈곤층의 수혜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질의2) 장관, 여론조사결과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공감(共感)이 가지 않으십니까?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유류세 등 생계와 직결되는 세금을 더 많이 삭감해 주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후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조세감면은 축소시키면서 대기업과 가진 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국민여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감세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세수를 늘린다.”고 했고 “모든 감세는 투자에 긍정적”이라고까지 강변(強辯)했습니다.

☞ (질의3) 장관, 그런데 정부가 주장한대로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늘었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 2009년 10월 기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전년동월 대비 33만 2000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32만 3000개가 줄어 듬.

정부의 감세정책은 일자리 창출 미흡, 재정악화 초래로 오히려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었고, 당초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가진 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켰습니다.

☞ (질의4)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정부가 의도했던, 안했던 대기업과 가진 자의 위기탈출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회생을 담보로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추진된 대규모 감세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질의5) 장관,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금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최대 복지정책입니다.

지난 2월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4.9%, 10.1%로 작년 12월에 비해 각각 1.4%, 2.5%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실업자 수는 4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실업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자로 인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

출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자 또다시 임기응변식으로 재정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2010 고용회복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는 대기업과 가진 자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서민에게는 고통분담을, 중소기업에는 문제를 떠맡기듯 해결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질의6)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통한 임기응변식 재탕, 삼탕의 실업대책을 반복하실 것입니까?

☞ (질의7) 장관, “998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 종사자의 88%를 중소기업이 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체 고용의 88%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었습니다.

2010년 중소기업청 예산은 2009년에 비해 일반회계는 △63.7%, 기금은 △27.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종 조정과정에서 대폭 삭감시켜 당초 정부 예산보다 △30억 700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은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질의8) 기획재정부가 2010년 중소기업청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학력 청년층 실업해소 및 고용창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질의9)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 지원정책이 일대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혜만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충제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신규 투자보다는 현금 쌓기에 열중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위 5대 그룹 상장기업의 사내 유

보금은 삼성 75조 원, 현대 31조 원, 포스코 29조 원, LG 27조 원, SK 22조 원 등 184조 원이나 됩니다.

☞ (질의10) 이렇게 대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 들어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 (질의11) 정부의 각종 특혜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신규 투자가 부진한 근본원인은 투자할 신수종사업이 없기 때문입니까? 불필요한 규제가 과다하기 때문입니까?

경제학자 케인즈는 정부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보다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책일관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 (질의12) 대기업이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2009년 초 당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박희태 대표까지 나서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조치에 상응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 (질의13) 장관께서는 경기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투자보다는 비생산적인 현금 쌓기에만 열중하는 대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질의14) 또 한 가지 정부는 공기업과 지자체를 통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매우 미흡하고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신규채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선진화 계획의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 (질의15) 불요불급한 자산의 조기 매각 등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은 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해서 번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투자부진→실업증가→가계소득 감소→내수부진→투자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성장잠재력 하락하고 부

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발전의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질의16) 현재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데 고용 없는 성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향후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계청)

통계청장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수는 2009년 88만 9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11만 9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수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 수는 400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1) 이는 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정부분 인정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2010년 2월 현재 실제 실업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116만 9000명과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805만 6000명, 구직단념자 25만 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156만 3000명, 취업준비 중인 63만 6000명 등 총 1,167만 7000명에 달해 체감실업률은 48.5%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자리 구하기에 지친 많은 서민,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했는데도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 (질의2) 정부는 실업통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새로운 지표개발에 관해 정부 내 협의내용과 언제까지 지표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졸자의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미흡으로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 종사자의 88%를

중소기업이 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체실업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 (질의1)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2008년 하반기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15만 6000명→ 2009년 상반기 16만 3000명→ 2009년 하반기 21만 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능 인력의 부족은 인력부족에 비해 2배에 달합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질의2) 노동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동부, 중기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IMD가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사회요구 부합도는 2009년 32위인데 대학교육은 51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사회, 경제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장관까지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 (질의3)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고용률은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청은 0.98%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질의4) 특수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까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요 확대와 공장가동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 (질의1)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 (질의2) 지금까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의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BTL, BTO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데 2010년 공기업 투자는 9조 8000억 원인데 반해 민자유치는 2조 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 (질의3) 민간투자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규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규 투자처가 부족하거나 수익성 악화 때문입니까?

☞ (질의4) 예산의 조기집행, 공기업 투자확대 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김성식 위원
(기획재정부)**

1. 고용문제에 있어 1998년 이후 금융위기 등에 의한 일시적 요인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요인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심화된 현황 및 특징, 이에 대한 정부대책의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2.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정권별(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기본원칙 및 방향, 목표, 각 정권에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개수와 이에 맞추어 제시한 정책수단의 추진경과와 실적은? 또한 각 정권별로 일자리 수 등 계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3. 1998년 이후 공공부문(정부, 공공기관, 재정지출 등)에 창출된 세부내역별 일자리 수는?

4. '전체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현재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상 문제를 업무보고(p.10)에서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쏠려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에 불리한 경제구조 문제를 업무보고(p.10, 중소기업 졸업기업 부담 완화)에서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부 수출대기업만이 경제를 이끌어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등

5.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쏠려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은데, 현재 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 지원 정책(세제, 금융 등)의 대상요건 및 지원정책 세부내역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어떤 지원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6. 최근 창의적 아이템의 상용화 관련 부문(예 : 아이폰의 앱스토어 등 정보통신의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이 1인 기업, 소규모 기업 등이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창업부터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제와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업무보고(p. 10)에서 창업·입지 등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7.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고용통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고용보조지표 개선 및 지자체별로 고용상황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p.9 참고

8.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업무보고 p. 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이견, 민간단체 등과의 이견에 대한 내

용과 이에 대한 대책은?

9. 실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업무보고 p. 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10. 민간고용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와 위탁규모를 연계하겠다고 했는데(업무보고 p. 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11.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및 건설부문에서의 노동시장 현황 및 대책은?

12.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TF팀 중 '실물경제 TF'의 구성 및 회의 내역, 안전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

(교육과학기술부)

1.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고급인력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건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실태조사, 용역보고, 관련 기업 등의 건의사항, 각종 통계지표 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2. 대졸 인력공급에 비해 이를 수용할 만한 중소기업이 부족하거나,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견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실태조사, 용역보고서, 각종 통계지표 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3. 대졸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업무보고 p. 5), 현재까지의 부처 간 협의내용 및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은?

4. 각 대학별(경영대, 법대, 이공대 등)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1인 및 소규모 창의적 기업, 벤처기업 등과의 산·학 협력체계 구축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은?

5. 각 대학별 이공대, 자연대의 실험조교 현황 및 처우, 고용상 지위적 신분은?

6. 각 대학별로 지역주민 등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교육대상, 프로그램, 취업과의 연계 등

7.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TF팀 중 '교육 및 인력양성 TF'의 구성 및 회의내

역, 안전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

(지식경제부)

1. '전체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현재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부장관의 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상 문제 : 하청, 문화콘텐츠 사업 등 수요독점/과점 문제 등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쏠려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에 불리한 경제구조 문제 등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부 수출대기업만이 경제를 이끌어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등

2.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쏠려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은데, 현재 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 지원정책(세제, 금융 등)의 대상요건 및 지원정책 세부내역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어떤 지원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3. 최근 창의적 아이템의 상용화 관련 부문(예 : 아이폰의 앱스토어 등 정보통신의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이 1인 기업, 소규모 기업 등이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창업부터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제와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4.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부문에서의 노동시장 현황 및 대책은?

(통계청)

1. 고용통계의 세부항목 중 1998년 이후 신설, 폐지, 개편된 항목과 그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 고용통계는 시계열 자료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특정 계층의 직업 이동에 대한 지표, 임금·소득·자산 계층별 이동에 대한 지표 등의 패널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외 사례와 함께 통계청이 시행 중인 통계지표는? 향후 추진 계획은?

3. 업무보고 중 향후 고용통계 확충계획(p. 7)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국토해양부)

1.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서의 노동시장 현황 및 대책은?

2. 4대강 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하기 바람.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고용과 관련된 지원혜택 현황은?

○한시적 지원과 영구적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2. 고용지원 등과 관련된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과 업무분장, 현재 추진 중인 역할은? 또한 지자체와 노동부의 지역센터 등의 설치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은?

○강석호 위원

(국토해양부)

◆첨단 우주항공 인력 확대 필요!

□이제 시대는 녹색성장시대이며, 더불어 미래는 첨단산업과 해양에 있음.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우주항공 인력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2009년 예산 35억 9900만 원으로 355명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계획은 43억 원으로 450명을 지원함.

<첨단 우주항공 인력양성>

(단위 : 백만 원, 명)

사업명	09년 계획		09년 결산		10년 계획		10. 2 실적(누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첨단 우주항공 인력양성	3,600	365	3,599	355	4,300	450	-	-

□이 사업 중 비행조종사 인력 양성 부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비행교육훈련원을 도입하여 항공산업 성장에 따른 조종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조종인력 양성의 국내 기반을 갖추는 사업임.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이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임.

⇒ 비행훈련사업자로 항공대와 한서대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업비 중 국가 부담이 75%, 민간부담이 25% 이상임. 항공대와 한서대 부담은 얼마로 하였는가?

○비행훈련사업자 : 한국항공대, 한서대 선정
- 지원조건 : 조종인력양성 및 대응자금 부담 (정부 75%, 사업자 25%)

- 양성인원 : 200명(사업용 조종사)
⇒ 비행훈련원 운영을 위해서는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 과정은?

□2010년 7월 개원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선발, 교육과정, 훈련기 도입, 교관 채용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대한 차질은 없는가?
□그리고 비행훈련을 위해서는 공군과 해군의

훈련공역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은?

□조정인력은 향후 5년간 약 1,6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480명 정도의 부족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 활용 중. 200시간 훈련비행이 요구되는 사업용비행기 조종사 자격을 따려면 미국, 호주 등 해외로 나가야하며 훈련 경비만도 1인당 1억 원 소요됨.

□향후 세계적으로 20년간 15만 명의 항공인력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국가 미래전략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고용증대 위한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장기적인 관점에 검토 필요!

□최근 우리 경제에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산·서민층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지난 2월 10일 이종구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

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 내용(이종구 의원 발의, 2010. 2. 10)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었는데 중소기업 고용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장관, 이 법률이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운영해 보고 고용 효과가 높다면 5~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소기업청)

◆일자리 창출 관련,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도입 방안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생산, 투자, 창업 등 실물지표는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체 근로자 수는 8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고용 인력의 79%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취약한 근로복지 환경 등으로 2009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부족인력이 21만 명으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청장,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급연구인력 지원(지식경제부 추진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공고에서 채용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고급인력 채용 후에도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인력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 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함.

⇒ 청장, 지금 인력 채용에 있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는가?

지금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가 더욱 심각함. 향후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지방 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지방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

◆중소기업 정책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서비스 필요

⇒ 청장, 중소기업청 종합정보 사이트인 비즈인포(BizInfo)에서 정부 정책 전체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Site)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쉽게 편리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견해는?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에서는 고용유지제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고용조정을 단행한 미수급 사업체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잘 몰라서”가 43.3%를 차지 한다는 보고가 있음.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책이 공고된 후 중소기업에서 자체 검토 후 지원신청까지 시간이 촉박한 반면, 정책 주관 부처의 심사 기간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음. 신청 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고 심사에서 최종 평가까지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책 내용은 동일한, 사업 주관과 시행부처가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주관은 노동부, 시행은 상공회의소, 인력공단 등 운영

□특히 선정 업체 평가에서는 각 부처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며, 최종평가 일정이 공고되지 않는 정책이 많음. 평가 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공고하고, 최종 평가까지의 일정을 함께 공고할 필요가 있음.

⇒ 청장께서는 정책 추진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

◆정부 지원 정책 현황 분석

□개선 요청 사항

1. 정책 홍보

○활용 현황 및 취약점

- 일부 지원 정책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함.

○요청 사항

- 중소기업 종합 정보(Biz Info)가 있으나, 정부 정책 전체 정보를 하나의 Site에서 조회 가능토록

2. 신청 기간

○활용 현황 및 취약점

-정책이 공고된 후 중소기업에서는 자체 검토 후 지원신청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반면, 정책 주관 부처의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림.

○요청 사항

-신청 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고 심사에서 최종 평가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필요

3. 신청 서류

○활용 현황 및 취약점

-중소기업 특성상 정부 지원 정책을 검토 신청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신청 서류 등의 작성 분량이 방대하며 내용 또한 복잡함.

○요청 사항

-신청 서류를 최소화하여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많았으면 함.

4. 경쟁률

○활용 현황 및 취약점

-일부 사업의 경우 최종 평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음.

정보화 지원 사업의 경우 10 : 1 이상임.

○요청 사항

-경쟁률이 심한 정책의 경우 사업 한도를 증액하여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5. 사업 주관

○활용 현황 및 취약점

-정책 내용은 동일하나 사업 주관과 시행부처가 달라 혼선 발생(예 : 노동부 주관으로 시행은 상공회의소, 인력공단 등 운영)

○요청사항

-창구 단일화 필요

6. 선정 업체 평가

○활용 현황 및 취약점

-각 부처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며, 최종 평가 일정이 공고되지 않는 정책 많음.

○요청 사항

-평가 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공고하고, 최종 평가까지의 일정을 함께 공고 필요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애로 사항

중소기업은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전체 규모는 업체 수의 99%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 수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고용 인력의 79%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용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에서 고급 핵심 인력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하여 공고에서 채용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고급인력 채용 후에도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인력지원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인력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수급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 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함.

향후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지방 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좀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항을 좀더 세분화해서 지원했으면 함.

○배은희 위원

(기획재정부)

1. 기업은행의 사례와 같이 민간에서 중소기업 인력의 Job mismatch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부가 이처럼 Job mismatch 해소를 위해 계획 혹은 실시 중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위 언급한 바와 같은 민간사업의 주체와 대상 등 범위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 보조 등 지원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2. 성폭력, 학교폭력 등 전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 있는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국토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오히려 분리발주를 규제로 보아 이를 철폐하여 비용절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과 향후 정책방향은?

(지식경제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하기 위한 기본요건 중 'R&D 상시연구인력 고용'을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면에서는 부적절해 보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 관련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의견은?

○정진섭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구직자·구인자 간 미스매치 해소방안은?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미스매치임.

기업은 회사에 충성하며 직무적합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구직자들은 직무적합인재가 되기보다는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중소기업은 자아·임금·복지 등으로 꺼려하여 서로 간에 눈높이의 차이가 발생함.

최근 기업들의 채용환경을 살펴보면, 교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직원의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원의 채용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입직	대기업	77.8	73.9	61.8	80.6	81.8
	중소기업	62.6	68.7	58.2	52.5	74.8
	전체기업	71.6	72.1	63.5	74.5	82.7
경력직	대기업	22.2	26.1	38.2	19.4	17.2
	중소기업	37.4	31.3	41.8	47.5	25.2
	전체기업	28.4	27.9	36.5	25.5	17.3

※경영자총연합회, 2009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최근의 신규채용 증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인턴채용의 급증에 따름이고, 민간 취업사이트의 설문에서 대학 4학년 재학생의 84%가 취업 6중 세트(학력·학점·토익·인턴십·공모전·봉사활동)를 가지고 있다고 함.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각 부처에서는 미스매치 해소를 공통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예산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부처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협의체 등의 공식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 또는 한두 차례의 견학으로는 부족한데 각 부처 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방안 및 대안은?

(지식경제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임.

이는 제도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오히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서라도 세계적인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중견기업육성방안이 마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언론 및 중소기업으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있음.

현재 중소기업에게는 160가지에 이르는 세제 및 금융혜택과 더불어 1,500가지에 이르는 지원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원책의 종류는 무엇이며, 최근 발표된 육성방안 이전에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다면 몇 종류의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새로운 육성방안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기존 중소기업 지원책의 종류에서 몇 종류의 지원책을 더 받을 수 있는가?

기존의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육성방안 마련에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빠져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기간, 세액감면 기간의 연장 등의 중

복 등 기존에 있던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견해는?

이번에 발표된 육성방안만으로는 세계 점유율 1위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교육과학기술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개편방안 마련 필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하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증가시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일자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교과부에서도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적극 부응하며 많은 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했음.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권의 지급이나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지원 등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 보기가 어려우며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호도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국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곳에 외부 청소인력을 이용한 청소용역사업을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교과부에서 5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970명의 인원을 채용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임.

이 사업 또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으로 이를 진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임.

현재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범위 내에 청소관련 용역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어 노동부와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투입된다면 진정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견해는?

(통계청)

◆고용통계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필요

최근 야당에서 고용통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ILO 기준의 실업률 통계가 아닌 선진국처럼 다양한 보조지표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본 위원도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동부를 대상으로 현 ILO기준의 통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정부의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었음.

현재 미국의 경우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큰 폭의 변동을 하는 등 시장에서 정부의 통계를 믿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통계가 발표된다고 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등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음.

특히 청년실업률 통계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발표하는 ‘뭇백만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더 신뢰가 가고 있음.

이와 같은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의 신뢰성 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실효성이 없는 통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마련될 경우 예산낭비와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마저 상실할 수 있는데 국제기준은 그대로 준수하면서 선진국처럼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가?

각 부처에서도 나름대로의 용역 등을 통해 통계를 수집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운영 관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계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의 견해는?

(지식경제부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감면과 체계적 보안관련 인력양성 필요

작년 9월, 한나라당 사이버 테러 대책 TF팀에서 DDoS 공격 재발 방지 및 사이버 보안 선진강국 실현을 목표로 ‘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TF팀에 본 위원이 팀장으로 민간부문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며,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관 3,000명 양성에 있습니다.

지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고용 계약형 석사과정, 지식정보 보안 아카데미 등을 신설하여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보안 전문가라든지 산업별 관제센터 등은 예산 미반영 및 타당성 문제 등으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 사유는?

더욱이 일반기업들은 정보보안 관련 인력을 보강할 여력이 부족한데, 이에 지경부와 기재부등이 법인세 감면 확대와 같은 방안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

DDoS 사태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보안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율을 일반기업들에 한해 현행 3%에서 상향조정하는 것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현재 과세표준 2억이 초과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로만 22%를 내고 있고, 이에 부가세 등을 더하면 24.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인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여력이 부족하여 인력 충원을 못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부담은 줄여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한 방안 및 대안은?

더불어 실질적인 인력 양성은 대학 학부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과부와 대학의 입장차이로 수도권 대학 학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고려대 등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학 총원정량제와 수도권소재 대학총원제 등에 묶여 진척이 더딘 상황인데, 우수한 보안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는 대학 측과 협의할 생각이 있는지?

(농림수산식품부)

◆시군유통회사 활성화 필요

현재 우리나라 농민과 어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농협과 수협 등은 읍면 단위의 영세성과 조합형태 의사결정의 한계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기업은 CEO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농림부에서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인과 조합법인, 그리고 시군이 각각 설립당시 총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하여야 설립이 가능한 시군유통회사는 현재까지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령의 경우, 50억이라는 자본금으로 09년도에 133억의 매출실적을 기록한만큼 농림부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라 기존 생산자단체인 농협 등과 원활한 원물조달이 되지 않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출자금으로 유통회사 설립과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장교섭력을 높임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0곳에 불과한 것은 기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농협 등의 반발로 인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보면, 미래전략과제에 첫 번째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목표로 삼았는데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토해양부)

◆해외 수주 전문인력 정부차원에서 양성 필요

이번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10년도 SOC예산 23.7조 원의 66%인 15.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해외 철도시장 진출 및 해외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작년에 이라크 아르빌 공항과 440억 원 상당의 공항을 위탁운영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필리핀, 몽골, 러시아 등 6~7개국과도 공항마스터플랜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만은 총사업비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극동 러시아지역 항만 개발사업에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업무보고서를 보면, 24조 원에 달하는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 내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이 범위를 더 확대하여 공항, 항만물류 등 각 분야별로 해외수주 전문 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국부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및 견해는?

○백재현 위원

(지식경제부)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1. 국가의 산업전략을 중소기업 중시에 두어라
2.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3.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감세와 규제완화, R&D 예산증가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대기업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의 96%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R&D예산은 증가시킨 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예산은 축소되었다. (2007~2011년 재정운용계획에서 HRD 예산증가율이 연평균 5.5%였으나,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증가율을 4.9%로 축소)

☞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정책은 쏟아내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책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 지방중소기업청 폐지 추진, 산은·기은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추진 등 일련의 중소기업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불명확한 정책 기조만 드러냈음.

☞ 민간 고용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2006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민간 부문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7%에 달한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높은 비중이다.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 산하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업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 되어 있다고 보는데,

☞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지식경제부는 산업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어 일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지식경제부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 집행, 조정하는 기능을 맡기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규모가 확장되는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건실한 산업구조와 경제상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 국가의 산업전략을 중소기업 중시에 두어라.

☞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50명 이상의 중견기업의 비중이 0.2%인 전형적인 호리병형 구조로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다른 OECD국가들의 중견기업 비중은 어떠한지 알고 있나?

2.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 장관,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정책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다.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최근의 창업부진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획재정부)

- ◆정부의 정책방향 고용회복에 맞춰야
 1. 우리의 경제 두뇌인 기획재정부, 희망을 상실했나?
 2.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3. 빈곤층 가구 급증에 따른 고용보조금 제도의 정비

의 정비

1. 우리의 경제 두뇌인 기획재정부, 희망을 상실했나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7p) 에서 밝힌 우리나라 고용 증장기목표를 보면 “향후 10년내 고용률 60% 달성”이라고 하고 있다.

	2007	2008	2009	2010(당초)	2010(목표)
▷취업자 증감(만 명)	28	15	△7	20 내외	25+a
▷고용률(%)	59.8	59.5	58.6	58.5 내외	58.7 내외
▷실업자(만 명)	78	77	89	86 내외	80 초반
▷실업률(%)	3.2	3.2	3.6	3.6 내외	3초반

노무현 정부 마지막인 2007년의 대한민국 고용률이 59.8%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향후 10년 후 2020년 대한민국의 장기 고용목표치를 ‘60% 달성’이라고 하고 있다.

☞ 이미 노무현 정부가 2007년도에 달성한 수치를 고용목표로 잡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747성장이니 3만 달러시대니 하며 노무현 정부를 비판해 왔으면서, 선거할 때는 온갖 달성불가능한 공약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더니 이제는 10년 후 장기목표인 2020년 고용목표를 노무현 정부가 2007년도에 달성한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지난해 말 한국재정학회는 기획재정부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 장관, 그 보고서는 재정건전성의 기초를 성장률과 고용률 중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3. 빈곤층 가구 급증에 따른 고용보조금 제도의 정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빈곤층 가구는 305만 8000가구로 사상 처음 3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작년 한해에만 13만 4,725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해당 가구소득의 50% 미만으로 정의되는 빈곤층(1인가구 포함)은 2006년 269만 가구에서 최근 3년 사이 37만 가구 증가하였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빈곤층 가구수(만 가구)	269.3	285.0	292.3	305.8
전체가구 대비 비중(%)	16.7	17.4	17.5	18.1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층 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장관, 이처럼 빈곤층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34만 개 일자리 주장은 단순함의 극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면서 사업예산 22조 원을 들여 일자리를 34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 34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일자리특위 업무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고용창출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모두 일자리 창출과 별 관련이 없는 국토해양부 추진업무만 나열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순공사비 19.4조)에 대해 200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다(10억 당 17.3명).

4대강 살리기는 이수, 치수, 수질개선 등의 복합 산업으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한 것이다.

(단위 : 억 원/명)

	총사업비	보상비	순공사비	취업유발효과
본사업	169,498	24,862	144,636	250,220
직접연계	52,504	2,884	49,620	85,843
계	222,002	27,246	194,256	336,063

현장에 가보면 중장비만 가득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올해 3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로 건설투자 1조 원당 일자리는 2,149~3,848개에 불과하고 이를 4대강 사업에 적용하면 4만 7000~8만 5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 이에 대한 차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식의 단순한 취업계수 단순적용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취업유발계수는 총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이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가 100명이라면 무조건 매출액 10억 원 당 1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에 따른 종사자 수는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감소)

☞ 차관은 4대강 사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4대강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단기적인 건설 일용직 일자리일 뿐이라는 비판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실은 일용직 일자리조차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나쁜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인력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청년층(20~29세) 실업률은 10.0%로 전체 실업률 4.9%의 2배 수준이다. (10. 2월) 인력수요 대비 대졸 인력의 공급 과다도 그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업무보고에 친절하게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기록해 놓았지만, 막상 교과부는 최근 2년 동안 교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동결 방침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사발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주지 않고, 비정규직 자리만 늘리는 급급한 졸속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과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온통 인턴채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대학·연구소 인턴, 교과부 행정인턴, 인턴연구원, 학습보조인턴, 해외인턴십……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의 인턴 양성소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교원 확보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OECD 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인 데 비해 한국은 초등교육 27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국적으로 5,813개의 초등학교, 3,077개의 중학교, 2,887개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상담교사는 전국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향후 교과부의 교원인력 증원계획은 어떠한가?

(답변서)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지난 2월 조특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해 월 100만 원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 법안이 중소기업의 고용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동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운영해보고 고용효과가 높다면 5~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는지?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재정 측면에서 복합적 장·단기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금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층의 구직난 문제 등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 제도는 최근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11.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동 제도의 일몰이 연장되어 상시화·장기화되는 경우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인 효과가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고용문제에 있어 1998년 이후 금융위기 등에 의한 일시적 요인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요인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심화된 현황 및 특징, 이에 대한 정부대책의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한 자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현황 및 향후정책방향>

1.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변화

□제조업 등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고용을 뒷받침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흡

○98~09년간 제조업은 8.1만 명 감소, 농림어업은 74.9만 명 감소, 서비스업은 425.5만 명 증가
- 단, 서비스업 고용의 약 1/3을 차지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3년 이후 32만 명 감소

○10.2월에는 서비스업(전년동월 대비, +31.0만 명)등의 취업자 증가

* 제조업(+4.5만 명) 취업자는 5년여만에 2개월 연속 증가

- 농림어업(△14.3만 명), 건설업(△8.7만 명) 등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

(단위 : 만 명, 명/10억 원)

연도	항 목	산 업 분 야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계
98	취업자 수(비중)	239.7(12.0)	391.7(19.6)	158.0(7.9)	1,202.3(60.2)	1,993.8
	취업유발계수*	82.0	18.6	24.1	33.2	24.7
09	취업자 수(비중)	164.8(7.0)	383.6(16.3)	172.0(7.3)	1,627.8(69.3)	2,350.6
	취업유발계수**	46.8	9.2	16.8	18.1	13.9

*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07년 지표

2.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구조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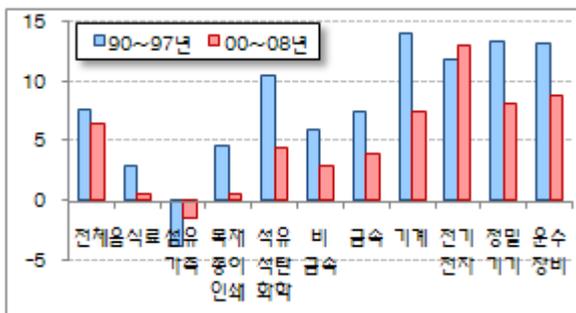
가.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

□제조업과 수출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저해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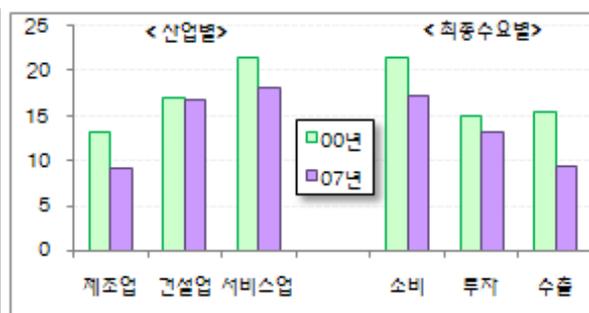
는 요인으로 작용

○제조업이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하락

제조업 산업별 성장률(%)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규모는 미흡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 및 대형화·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감소
 * 사업체당 인구 수 : (음식숙박업) 한(08년) 78

명, 일(04년) 263명, 미(02년) 509명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투자 규제,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

	취업자 증감(만 명)			취업자 수 (만 명, 08년)	취업자 비중(% , 08년)				
	00~08 총계	00~08 연평균	09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계	242	30	△7.2	2,358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56	△7	△3.8	169	7.2	1.5	1.5	4.2	2.3
▶제조업	△33	△4	△12.6	396	17.3	10.9	12.0	18.4	22.0
▶건설업	23	3	△9.1	181	7.7	7.5	8.1	8.4	6.5
▶서비스업	307	38	18.6	1,609	67.7	79.5	78.0	68.9	69.0
-도소매·음식숙박	△8	△1	△13.9	568	24.1	20.9	19.0	23.5	17.4
-보건의료·사회복지	41	5	15.6	84	3.6	12.5	12.4	9.4	11.7
-사업서비스*	86	11	7.0	222	10.2	12.7	12.2	12.1	10.8
-교육	59	7	4.8	178	7.4	9.1	9.1	4.5	5.9

*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등

나. 노동시장 구조 측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
 ○반면 원·하청기업 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크게 열악한 상황
 ○이러한 고용의 이중구조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선호 현상을 심화

시키는 문제점
 □기업은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선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은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고, 사회보험의 가입률도 낮은 상황
 *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비율(%) : (05.8) 67.2 (09.8) 59.1(연령·학력·근속연수 감안 시, 08년 87.1%, 노동부)

<기간제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 , %p)>

	05.8	06.8	07.8	08.8	09.8
▶국민연금	47.5(△28.2)	51.4(△24.7)	57.2(△19.1)	56.4(△20.9)	56.5(△22.5)
▶건강보험	48.7(△27.2)	53.2(△22.9)	60.0(△16.7)	59.8(△18.2)	64.1(△15.7)
▶고용보험	45.2(△18.6)	49.0(△15.6)	55.5 (△8.8)	56.0 (△9.8)	62.0 (△5.6)

* ()는 정규직과의 격차(%p)

○기간제법 시행(09.7월) 등의 영향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직 부담이 발생
 □연공급여체제와 근로형태의 제약이 고용 증대를 어렵게 함.
 ○장기근속에 따른 높은 급여 체제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여력도 제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제 등 법·제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가 제약
 3.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가.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정부 대책 현황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환경개선 대책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

* R&D지원 강화 등 ‘투자촉진 방안’(09.7) 추진 중

* 녹색기술, 첨단융합 등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선정하고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09.1)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9.5)·추진 중

* 기업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총 4차례-08.6, 08.9, 09.7, 10.1)

○제조업 등 고용여력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 산업 적극 육성

* 부품소재 자립화 지원,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등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적극 육성(10.3 추진전략 발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대책 추진을 통해 고용급락을 차단

*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 연쇄 도산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급감(최대 △21.9만 명, 09.5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고용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

* 09년 주요국 취업자 증가률(증가규모)

: 미 △3.8%(△549만 명), 일 △1.6%(△103만 명), 한 △0.3%(△7만 명)

□정책 방향

○정부는 투자와 성장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

-성장을 하지 않으면, 고용 증가를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의 고용수준도 유지할 수 없음.

○경제운용에 있어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 (10년 목표) 고용률은 09년보다 0.1%p 높은 58.7%로 제고, 취업자 증가는 20만 명(당초 전망)→“25만 명+d”

- (중장기 목표) 15년 위기이전 고용률(59.5%) 회복,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 달성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고용 기준을 지원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투자금액 규모 등에 따라 세제지원

중(예 :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은 1000만\$ 이상 등)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U턴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3년간 100%, 2년간 50%)에 준하는 세제 지원 방안 강구

- 정책 자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

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부대책 현황

○08년 이후 총 5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 마련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① 1단계(08.4월) : 관광·교육·지식기반서비스 등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② 2단계(08.9월) :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③ 3단계(09.1월) : 인적 인프라 및 R&D 등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

④ 4단계(09.5월) : 차별개선 및 9개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⑤ 5단계(09.9월) :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4.8일)를 통해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대책의 실효성

○외국인환자유치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

* 외국인환자수(만 명) : (07)0.8 (08)2.7 (09)5.0
일만여행수지(억 불) : (07)△109 (08)△49 (09)+1

○다만 일부 정책은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지연

*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기준 규정법안 등(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지연)

□향후 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완화 등 추진

- 간병·보육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산업의 시장형성 촉진과 인프라 확충을 유도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은 국

민공감대 형성도 병행하여 추진

다. 공정노동시장 활성화

□정부대책 현황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

* 대기업을 중소기업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프로그램 이행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1년 후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10.3월 말 현재 131개 대기업을 5만 2,789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시행(09.4)하고, 서면실태조사·직권조사 등을 통해 감시와 제재 강화

□정부대책의 실효성

○과거에 비해 하도급법 준수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거래 상황이 상당부분 개선

* 하도급법 준수 비율(%) : (00) 18.1 → (05) 41.5 → (09) 57.1

○다만 원·하청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잔존

- 납품단가 인하 압력, 불규칙한 발주, 납기단축, 과도한 품질수준 요구, 납품대금 결제 기일장기화 등

* ‘하청기업의 납품애로사항(복수응답)’ 조사결과 납품단가 인하(60.7%)와 원자재가격 상승분

미반영(54.7%)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힘(08, 중기중앙회)

□향후 정책 방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하도급거래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

- 특히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위계적 지배구조가 수평적 상생관계로 전환되도록 노력 등

라. 노동시장 유연성 대책

□정부대책 현황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기조 유지

- 노동법 개정(10.1.1)을 통해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제도 개선

*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 10.7월 시행, time-off제를 통해 합리적 노동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 복수노조 : 11.7월 시행, 교섭상 혼란 방지를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마련

○(임금체계 유연화 지원)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등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노사분규 발생 건수,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화 추세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노사분규건수 (사업장 단위)	250	235	322	320	462	287	253	212	130	175
근로손실일수(천일)	1893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627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경직성 지표는 2.29로 OECD 평균인 2.11보다 높은 수준

□향후 정책 방향

○단시간근로제·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직무·성과급 확산 등을 통해 고용·임금의 유연성 제고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정성 제고 노력도 병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 직업훈련제도를 강화

하고, 취업장려수당 등 취약계층 취업을 위한 지원 실시

98년 이후 정권별 일자리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일자리 창출 개수와 주요 내용의 추진 경과와 실적을 물으시며, 각 정권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성적·계량적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98년 이후 현재까지 각 정권별 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성과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

1. 국민의 정부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 외환위기 직후 실업자 및 실업률 급증에 따라 실업 대책 및 고용안정에 중점

* 외환위기 직후 실업률(15~64세) : (97) 2.7% → (98) 7.2% → (99) 6.6%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주요내용) 98.3월 국무총리 산하 '실업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 전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 추진

① 고용안정 지원 : 고용보험사업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인 경영악화시 해고 대신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유지를 유도

- (채용장려금)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

②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5년간 총 5.9조), 정부지원 인

턴제 등 재정지원을 통한 단기일자리 제공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지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근원적 일자리 창출

③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98.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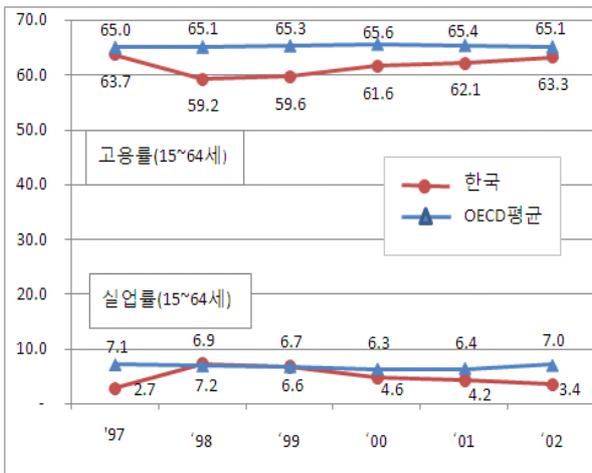
- 고용안정센터 확대(98년 99 → 01년 168개소),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구축 등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추진 성과)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통해 실업률 감소, 고용률 제고 등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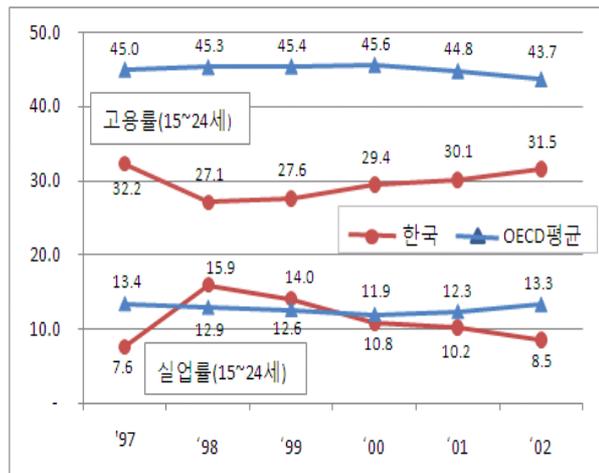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97) 5.8 (98) △5.7 (99) 10.7 (00) 8.8 (01) 4.0 (02) 7.2

○98년 외환위기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점차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 등의 경향

전체 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여성,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여건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

<97~02년간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지표 추이(%)>

		97	98	99	00	01	02
여성 (15~64세)	고용률	51.6	47.3	48.1	50.0	50.9	52.0
	실업률	2.4	5.5	5.3	3.8	3.5	2.9
	경활률	52.9	50.3	50.8	52.0	52.8	53.5
고령자 (55~64세)	고용률	63.8	58.7	58.2	57.8	58.3	59.5
	실업률	1.1	4.1	4.5	2.9	2.3	1.7
	경활률	64.4	61.2	61.0	59.5	59.7	60.5

2. 참여 정부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 고용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고용정책을 수립·추진

* 7% 경제성장을 통해 5년간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대선공약)

□(주요내용) 장기적 관점의 고용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을 제시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3~2008) 수립(03.8월)

-산업구조 변화, 고령인구 증가, 고학력자 급증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주요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인력수급 원활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사회안전망 및 고용 인프라 확충 등 선정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04.2)

-참여정부 기간 동안 고용률 61% 및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동력 확충’과 ‘추가적 일자리 발굴’ 추진

-근로시간 단축·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고용보조금 등을 통한 빈일자리 채우기,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추진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

* 지원 규모 : 03년 0.2만 명, 72억 원 → 07년 20.1만 명, 1.3조 원

□(추진 성과) 고용정책의 초점을 실업해소대책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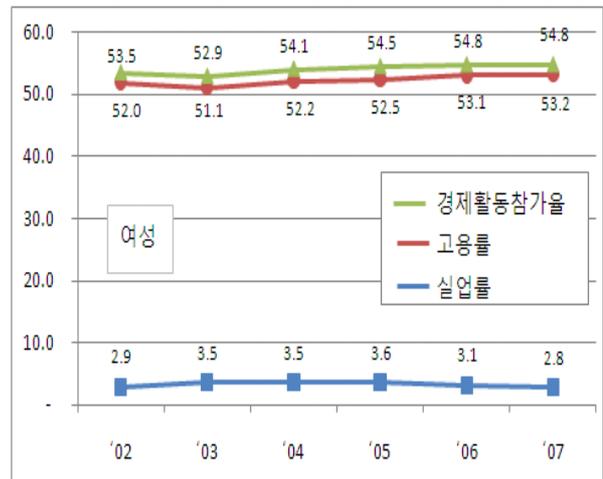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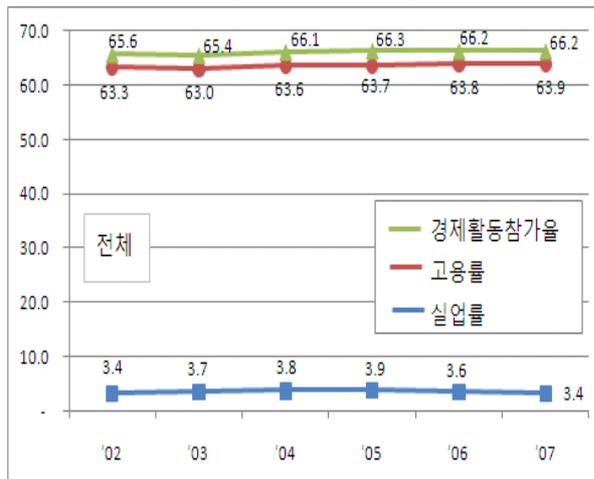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02) 7.2 (03) 2.8 (04) 4.6 (05) 4.0 (06) 5.2 (07) 5.1

○15~64세 인구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실업률 감소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둠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03년 2,214만 명에서 07년 2,343명으로 129만 명 증가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투자 확대로 여성 관련 고용지표가 상당부분 개선

참여정부기간 고용지표(15~64세) 추이



○03~07년간 OECD국가들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반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

<참여정부기간 상용직 근로자 비중 추이(%)>

구분	03	04	05	06	07
▪ 한국	50.5	51.2	52.1	52.8	54.0
▪ OECD평균	88.5	88.1	87.8	87.6	87.5

3. 현 정부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 경제성장률 외에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강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고용안정대책과 함께 경제의 근본적인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

* 7% 경제성장을 통해 5년간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대선공약)

□(주요 내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력 제고에 중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09년 희망근로(25만 명), 청년인턴제(9.9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6.7만 명) 등 추진

○민간의 고용 창출력 증대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적극 추진

* 4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08.6, 08.9, 09.6, 10.1월)을 통해 242개의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를 개선하고, 4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08.4, 08.9, 09.1, 09.5월)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기반을 마련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일자리 정부’ 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

-민간고용증개소 지원 등을 통한 취업알선 강화, 취업장려수당 등 재정·세제 지원 등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 10년도 목표 : 취업자 증가를 '25만 명+a'로, 고용률을 58.7%로 제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강화를 위해 재정·세제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신성장동력 육성,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고용구조 개선도 병행 추진

* 중장기 목표 : 고용률을 매년 0.1%p이상 제고하여 10년 이내 60% 달성

□(추진 성과) 경기침체로 08년 하반기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해 고용급락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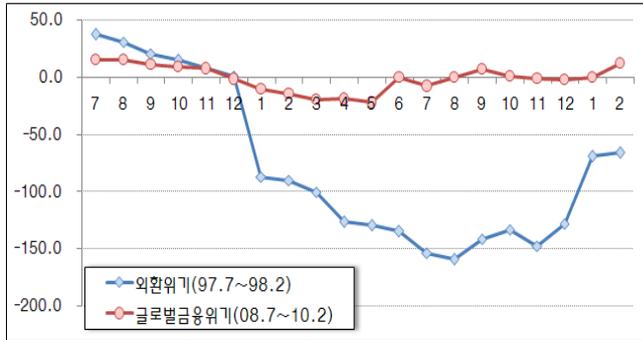
○기업 연쇄도산 등에 따라 취업자 수가 급감하였던 외환위기시에 비해 고용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

* 취업자 증감 최대폭(만 명, 전년동월비) : 98.8(△159.2), 03.4(△14.5), 09.5(△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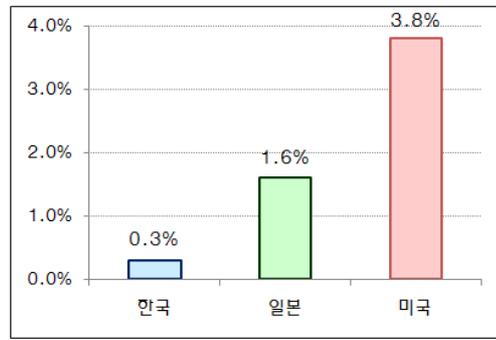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고용 악화 정도가 완만

* 09년 주요국 취업자 증가율(증가규모) : 미 △3.8%(△549만 명), 일 △1.6%(△103만 명), 한 △0.3%(△7만 명)

취업자 증감 비교(만 명, 전년동월비)



09 주요국 취업자 감소율 비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개선에 따라 고용회복이 가시화

-10.2월 취업자는 12.5만 명 증가하여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특히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가 08.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어 민간고용 개선을 시사

* 공공행정 제외 시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 (09.11)△32.8 → (12)△16.7 → (10.1)△1.1 → (2)14.2

○09년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

구분	08	09	10.1	10.2
상용직 근로자(천 명)	9,007	9,390	9,712	9,786
상용직 비중(%)	55.6	57.1	59.6	60.1

98년 이후 공공부문(정부)에 창출된 일자리 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채용인원 일자리 수

연도별	일자리 수(1일)
2009	259,943명
2010	100,000명 (채용목표인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채용인원 일자리 수

연도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009	21,082명	7,192명	13,890명
2010	13,360명 (채용목표인원)	4,000명	9,360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수(98~04)

구 분	일자리 수
계	3,619,000
1998	350,000
1999	1,439,000
2000	795,000
2001	447,000
2002	334,000
2003	163,000
2004	91,000

※98년 IMF 위기 시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05년부터는 지방이양 되어 지자체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정원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3~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신규 채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정규직 신규채용(천 명)	12.4	15.4	11.9	14.3	10.8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총 13.6천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구 분	08년 (10~12월)	09년
청년인턴(천 명)	2.9	10.7

1998년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의 세부사업별 일자리 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청하신 1998~2007년 일자리예산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처 일자리 사업은 2008년도 편성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사업리스트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전체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요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 등으로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위원님께서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 협력문화 조성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완화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보호 위주에서 기술력·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핵심기술 탈취·유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 일방적 단가인하, 감액 등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시정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성과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에도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기술자문 및 지원 등

□또한 일방적 위탁취소 등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참고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여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함.

→ 위반 시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과징금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처분을 받은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 (국토부, 09.1.28)

□“불공정하도급통합정보시스템(08.11월 구축)”을 통해 단가 부당인하 행위 등을 감시·시정하고,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공정위)

* 그간 12개 기업집단 76개 대기업이 약 2만 7000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하도급법’을 개정(09.3월)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화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중앙회는 동제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09.4월부터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이행점검단’ 가동

□「하도급 계약 추정 제도* 도입」(10.7월 시행 예정)하여 구두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

*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서면계약서 없이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계약 성립을 추정

중기 졸업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시 급격히 증가되었던 조세 및 금융 부담을 분담완화기간(5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저한세율의 경우 7%에서 졸업 후 10~14%로 급증하던 것을 졸업 후 1~3년차에는 8%, 4~5년차에는 9%, 이후 10~1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의 경우 25%에서 졸업 후 3~6%로 급감하던 것을 졸업 후 1~3년차에는 15%, 4~5년차에는 10%, 이후 3~6%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보증축소,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졸업 직후 0.5% 부과하던 것을 졸업 후 1년차 0.1%, 2년차 0.2%, 3년차 0.3%, 4~5년차 0.4%, 이후 0.5%로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부 수출대기업만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정책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촉진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수립한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선진무역 인프라 확충전략(09.11.30,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14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40% 달성 및 200만 불 수출기업 1만 개 추가 육성」을 정책 목표를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보증 확대,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가치제고 등을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의 대상요건 및 지원정책 세부 내역과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어떤 지원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요건 및 지원내용은 개별 지원정책의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된 세부자

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3월 18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 완화,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기업들이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창업부터 경영활동에까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물으심

□현 정부 출범이후 4차례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 창업 및 경영활동 관련 제도개선을 수행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0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우리나라 순위 : 전체 19위, 창업 53위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창업환경 개선,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인설립 절차(8단계→4단계) 및 기간(14일→7일)을 단축하고,

○1인 창조기업,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하여 모태펀드* 일정비율(약35%) 우선지원, 신기보 특례보증 확대, 12년까지 벤처펀드 3.5조 원 추가 조성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업력 3년이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잔액(09.11월) : 9,295억 원(비중 34.6%)

창업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전문펀드(09~10년) : 1,413억 원 출자

창업·입지 등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현 정부 출범이후 4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1차(08.6) : 출충제 폐지 등 입지·세제·토지

이용 분야 개선

* 2차(08.9)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물류·정보통신 분야 개선

* 3차(09.7) : 포이즌필 도입 등 기업지원 분야 개선

* 4차(10.1) : 기업비용부담완화 및 건설, 환경 등 규제개선

□특히 올 해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물류, 입지,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전문가, 협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참고1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중점 추진내용

① 입지공급제도 개선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공급대비 임대율이 저조한바, (08년 44%,09년 12%)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 방안 검토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는바,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 검토

② 기업물류비 절감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 활용 확대 유도, 물류 공동화율 제고 등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 제3자 물류 활용 비율 : 한국 48.2%(09), 미국·유럽 60~75%(08)

** 제3자 물류 활용 시 물류비가 평균 14% 절감(08~09 국토부)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③ 건설·건축 규제완화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검토

④ 외국인투자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 마련 검토

*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참고2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일정	추진 과제	주관부처	관련부처
3월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재정부	
5월	물류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국토부	재정부 지경부
6월	건설·건축·임대산단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국토부	재정부 환경부 지경부 산림청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I)	재정부	관련부처
9월	입지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재정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산림청
	외국인 투자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지경부	재정부
11월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II)	재정부	관련부처

고용보조지표 발표 여부, 지자체 고용통계 개선 등 고용통계개선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고용 여건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보조지표를 개발·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조지표 발표 여부와 방식은 지표의 객관성, 통계적 유의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발표하고 있음.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 단위 고용상황은 연 1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고용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행안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통계에 대한 수요,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 조사 주기와 수행 기관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과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거의 전 부처와 관련되

어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관계부처 간 의견이 대립해도 이를 총괄·조정할 추진체계 및 수단이 미흡하며,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도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및 서비스산업을 총괄하여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마련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고용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와 위탁규모를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현황) 부족한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

☞ 10년도 민간위탁 사업 현황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총 11,000명 중 4,100명, 52억)

-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총 20,000명 중 1,500명, 27억)
- 여성·노숙인·건설인력·결혼이민자 등 전담 취업지원 사업(44개소, 22억)

-다만 각 사업별로 위탁비 산정기준이 상이하
고, 시장가격 대비 위탁비 수준이 낮은 상황

<09년 기준 사업별 위탁비 지원 수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	
		전직지원	그 외 고용지원센터
1인당 150만 원 (취업성공금 30만 원 포함)	취업알선 1인당 30만 원 (3개월)	1인당 60만 원	· 인건비 : 1인당 월 150만 원(2인) · 운영비 : 월 150만 원

☞ 취업지원 전 과정 관련 시장가격 : 200만 원 내외(최소 150만 원 수준)

○(개선방향) 공공고용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탁물량을 확대하고,
시장가격 수준으로 위탁비를 현실화

-다만 위탁비를 '성과'에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 성과와 예산집
행을 연계

※10년도 시범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27
억) 위탁비를 서비스 대상자 1인당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성과 연계형 지급방식(기본경비 100
만 원 + 취업 성공 시 30만 원 + 3개월 근속 50
만 원)으로 개선

⇒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위탁물량 확대 추진

실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동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
이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부분의 노동
시장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사업체고용 동향조사(반기)”
국가통계가 있으나 「운송·장비 제조업」 분류에
조선 산업이 포함

○조선 부분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산출되고
있지 않음.

○다만 지경부가 지자체를 통해 임의로 조사한
조선사업 고용조사에 따르면 09.6월 말 현재 약
16만 명이 고용 상태

-대형 조선사 13만 6000명, 중소형 조선사 2만
4000명

□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조선경기 침체
로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주로 중소 조선사의 경
영위기 우려

* 대형 조선사의 경우 현재 향후 약 3년치의
수주잔량을 기 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정상 영업이 가능 전망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중소조선사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조선산업의 고용상태가 급속히 악화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서의
노동시장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0.2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159.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286.7만 명)의 7.0% 차지하고 있으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공공투자 증가에도 불
구하고, 민간건축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고
용사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취업자 수 추이(만 명)>

	08.9	12월	09.3	6월	9월	12월	10.1	2월	(전년동기비)
전체	2,373.4	2,324.5	2,311	2,396.7	2,380.5	2,322.9	2,286.5	2,286.7	(+0.5%)
건설업	179.9	175.9	173.6	177.6	172.4	170.1	161.7	159.5	(△5.1%)

□이에 정부는 10년도 SOC 예산(23.3조 원)의 66%인 15.4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로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고 있으며,

○PF대출 보증 활성화 등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직종별 일자리지도(Job-map) 작성, 일용직 경력증명서 발급 등 건설인력 공급기반을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TF 팀 중 '실물경제 TF'의 구성 및 회의 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책조정총괄과 조현진 사무관이 의원 보좌관님과 합의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 사무관 (02-2150-45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경제정책은 서민살리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경제위기 극복대책이 대기업과 가진자의 위기탈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위기극복과정에서 서민 등 소외 계층을 꼼꼼이 챙기는 국정운영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근로, 사회적 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 희망근로 사업 : 09년 25만 개의 일자리 제공
- * 청년인턴제 : 09년 9.9만 명 채용(중앙정부 및 지자체 행정인턴 2.6만 명, 공공기관 인턴 0.9만 명, 중소기업 인턴 3.2만 명 등)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08)1.1조 원, 11.2만 명, (09)16.4조 원, 16.7만 명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08.6.29)',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09.3.12)' 등을 통해 서민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맞춤형 생계지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미소금융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기회 확대를 통해 자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마련(09.3)하여 근로

능력계층에게 소액 생계비(현금)을 한시 지원(5,385억 원)하고, 근로능력계층은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2.6조 원)

*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제고 및 생계지원을 위해 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59만가구에 4,537억 원 지급

* 미소금융을 확대하여 향후 10년간 2조 원 재원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R&D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중기청 정책자금 : (08) 3.2 → (09) 5.9 → (10) 3.1조 원

* 중소기업 R&D예산 : (09) 4,895억 원 → (10) 5,607억 원

□올해도 서민생활 안정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적립하고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09년 1.5→10년 2.0만 명) 및 자활근로(09년 4.8→10년 6.5만 명) 확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09년 35→10년 39만 명)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 정부 2년간 정부정책의 최대 수혜층이 대기업과 부유층이라는 응답이 73%나 되는 데 반해 서민과 빈곤층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체로 공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되,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민생안정 위한 일자리 추경(09.4.29)' 등을 통해 역대 정부 중 최대규모의 복지지출을 시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 복지지출 비중(총지출 기준,%) : (07) 25.8 → (08) 26.2 → (09추경) 26.6

* 복지지출 규모(총지출 기준,조 원) : (07) 61.4 → (08) 68.8 → (09추경) 80.4

* 공공사회지출(GDP 대비, %):(90)2.9→(95)3.3
→(05)6.4→(06)7.3→(07)7.5→(08)8.3

* 공공사회지출(조 원) : (90)6.1→(95)22.5→(05)75.5→(06)89.0→(07)98.7→(08)112.2

-특히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해 08~09년 중 31.3조 원을 재정에서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 재정지출을 통해 20.6조, 감세를 통해 10.7조 지원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08~09년간 총 재정지원액 49.6조 원의 63.1%

○이에 따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9년 소득 분배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니계수 : (07)0.312→ (08)0.315→ (09)0.314

□다만 고용개선 지연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이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 및 투자증가 등을 통해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세정책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600대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4% 감소(88.2조 원) 하였으나,

○감세* 등 투자촉진정책에 힘입어 일본** 등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

* 법인세율-(2억 이상) : (07)25% → (08)22%

→ (12)20%,

- (2억 미만) : (07)13% → (09)11% → (10)10%

** 일본(1,475개사 기준, 조엔) : (08) 27(△5.6%) → (09) 22.7(△15.9%)

□올해 경기회복 본격화됨에 따라 600대 기업의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03.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전경련)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고용악화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7만 명 감소하였고, 공공행정부문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6.4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동월비) : (09.12) △1.6 (10.1) 0.5 (2)12.5 (3)26.7

- 공공행정 제외 시 : (09.12)△16.7 (10.1)△1.1 (2)14.2 (3)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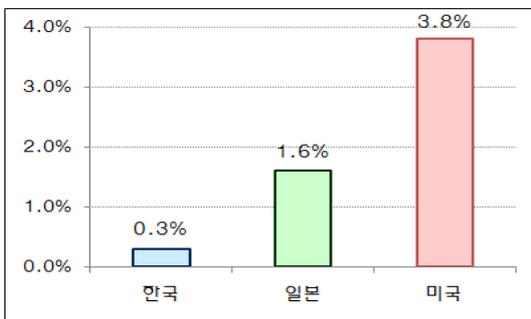
□다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대책 추진에 따라 고용 여건 악화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완만한 수준입니다.

* 09년 주요국 취업자 증가율(증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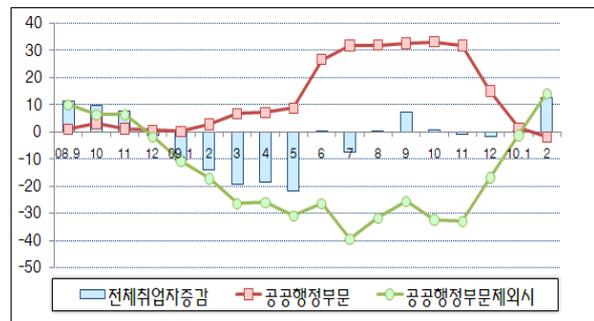
: 미 △3.8%(△549만 명), 일 △1.6%(△103만 명), 한 △0.3%(△7만 명)

○특히 10.2월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최근 민간부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09 주요국 취업자 감소율 비교(%)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동월비)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과 가진자의 위기탈출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금경감이 되도록 전환할 용의?

□08년 정부의 감세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것이며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 등 선제적 재정정책은 경제위기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는 등 경제안정에 기여

- IMF는 소득세·법인세 감세는 시간을 두고

우리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분석

* GDP 1%규모 감세시 GDP성장효과(증수) (IMF)

• 소득세 (1년 0.27%, 5년 0.27%, 10년 0.37%)

• 법인세 (1년 0.12%, 5년 0.25%, 10년 0.80%)

○ 감세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가 생기면 저소득·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음.

□ 소득세율 개편도 저소득 구간의 경감률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고

* 소득세 경감율 : (최저구간) △25.0% 인하(8 → 6%, △2%p)

(최고구간) △ 5.7% 인하 (35→33%, △2%p)

○ 세율 인하시기도 최저구간은 09년에 즉시 2%p 인하한 반면, 최고구간은 12년에 2%p 인하될 예정

□ 그 밖에도 유가환급금 지급, EITC 확대, 유류세 환급, 월세소득공제 신설, 폐업 영세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지원 등 서민·중산층을 배려한 선별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통한 임기응변식 재탕, 삼탕의 실업대책을 반복할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 정부는 지난 1.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단기 대책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함께 구조적인 고용창출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입니다.

○ 빈일자리에 취업애로계층이 조속히 취업하도록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한시적 재정·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의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조적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용 총량이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증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

*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의 진입·영업규제 완화, 보육서비스 개선 등

○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

*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 내실화 등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유도, 산학연계 강화 및 기능인력 양성지원 등

○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998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 “998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체수 : 전체 297.7만 개, 중소기업 279.4만 개

종사자 수 : 전체 1,261.3만 명, 중소기업 1,114.9만 명

2010년 중소기업청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 10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 09년에 비해 감소하게 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 한시적으로 확대한 유동성 지원 부분을 조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 중소기업예산(조 원) : (08) 5.6 → (09본예산) 7.8 → (09추경) 11.9 → (10) 6.0

* 금융지원(조 원) : (08) 3.5 → (09본예산) 5.4 → (09추경) 9.2 → (10) 3.2

* 유동성 지원 제외(조 원) : (08) 2.1 → (09본예산) 2.4 → (09추경) 2.7 → (10) 2.8

○ 한시적으로 확대한 유동성 지원 부분 제외 시에는 10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 09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정책이 일대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나라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예를 들자면

○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5.9조 원, 신용보증 67.4조 원 등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킨 바 있으며

○금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 직전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

* 취업장려수당 :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 후 1개월 30만 원 → 6개월 50만 원 → 12개월 100만 원 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 지원 정책이 일대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임금근로자 약 87%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어 고용안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 규모별 임금근로자 비중(08, 사업체조사) : (300인 미만) 86.6%, (300인 이상) 13.4%

□지난 1.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마련한 고용안정대책도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구인·구직 DB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

고 민간고용기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인력충원을 지원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장려수당지급, 장기실업자 취업 시 소득공제 혜택부여 등 중소기업 근무의 인센티브를 확대

* ① 취업장려금 :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 시 본인에게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② 전문인턴제 :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

③ 장기실업자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 시 월 100만 원 비과세(3년간)

④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 상시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

⑤ 중소기업 직업환경 개선 :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 시 우선 배정

○구조적인 고용창출력 증대를 위해 고용친화적 제도개편, 노동시장 효율화 등도 지속 추진

대기업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반증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기업의 현금성자산 (기말기준, 조 원)>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118.7	109.7	111.0	118.5	134.3	149.2	155.5	147.5

○이는 경제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상존’ 및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에 주로 기인

* 중국 등 개도국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의한 급속한 진입 증가와 선진국의 구조조정 및 퇴출지연으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 가능성

○크게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09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기업의 현금성 자산도 소폭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08.4/4) △14.0→(09.1/4)△23.5→(2/4)△15.9→(3/4)△7.4→(4/4)12.9 (계절조정전기비, %) : (08.4/4) △2.6→(09.1/4)△11.2 → (2/4) 10.1 → (3/4) 10.4 → (4/4) 4.7

□정부로서는 기업들이 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

를 늘리고 고용창출에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음.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부진한 근본원인은 투자할 신수종 사업이 없기 때문인지, 불필요한 규제가 과다하기 때문인지 물으셨습니다.

□전경련에서 발표한 600대 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투자활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과 함께 ‘신규 투자처 발굴애로’를 지적

* 「10년 시설투자 계획 및 09년 실적」 중 투자

저해 요인 설문(전경련)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49.4%), 신성장동력 등 신규 투자처 발굴 애로(24.3%), 투자자금 조달 애로(12.4%) 등

□정부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신규투자처 확충을 위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09.1.13, 미래기획위원회)하고,

○총 17개 동력, 200개 과제에 대해 향후 5년간 24.5조 원을 투자할 계획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대기업이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MB정부 출범부터 기업투자촉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4차에 걸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해 왔으며,

○OECD 최고수준의 R&D 비용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 규제개혁만족도(전경련) : (08) 17.1% → (09) 27.1% → (10) 39.1%

○앞으로도 투자촉진정책의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2 MB정부의 투자·고용 대책 추진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① 1단계(08.4.25) :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수지 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 시장창출

② 2단계(08.9.12) : 서비스규제 합리화 및 창업촉진

③ 3단계(09.1.14) :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및 R&D 활성화

④ 4단계(09.5.8) :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⑤ 5단계(09.9.16,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 관광·레저·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기업환경개선

① 1차(08.6.4) : 입지·세제·토지이용·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되는 47개 과제

② 2차(08.9.12)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물류·입지 등의 기업투자애로 해소 등 71개 과제

* 중소기업 R&D협력 펀드 조성(09.2), 제2롯데월드 신축관련 규제완화(09.3) 등

③ 3차(09.7.2) : 포괄적 동산담보·포이즌필 도입 등 국제기준에 미흡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완화 위주 57개 과제

④ 4차(10.1.14) : 중소·지방기업의 애로사항 및 환경·건설분야에 중점을 둔 규제완화 등 67개 과제

□세제개편

① (08.9.1) 법인세율 최대 5%p 인하,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 원→2억 원)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2귀속) 20%

② (09.3.13)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기업신규투자·서비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

□녹색뉴딜 종합추진계획(09.4.14) : 일자리 창출 및 녹색성장 연계성이 강한 분야 위주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 선정·추진

□일자리 추경(09.4.29) :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성장 분야 조기사업화 등 28.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09.7.2) : OECD 최고수준의 R&D 비용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펀드 조성 및 R&D 투자 확대 방안 마련

신규투자보다는 비생산적인 현금 쌓기에만 열중하는 대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현금보유 및 투자의사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규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

□특히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 마련한 대책의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 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점검단 운영(매월), 투자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09.9.16), 기업환경개선 대책 이행실적 점검(10.3.8), 세계개편안은 법령개정 완료(10.1.1)

○기업환경개선대책, 서비스산업 경쟁촉진방안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에 더 박차를 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진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을 통해 민영화, 출자 회사정리, 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

조조정을 추진하였고,

- 보수수준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불합리한 노사관계 합리화 등 경영합리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화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속히 변모될 수 있도록

-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 선진화 추진실적을 경영평가 시에도 반영하여 평가하고 부진한 기관은 인사·보수상 불이익 등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 선진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선진화 계획	추진 현황
①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년 민영화 추진대상기관(9개) 중 3개 매각, 3개 상장 완료, 3개 매각공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상장) 그랜드코리아레저, 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매각공고) 한국토지신탁, 88관광개발(88CC),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10년 이후 대상기관(15개)도 정상준비 중
② 출자 회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1개 출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8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매각) 41개, (청산·폐지) 5개, (통폐합) 2개 나머지 83개도 매각공고 등 정상진행 중
③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개 기관 →16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토공 등 32개 기관 통합을 완료하여 14개 통합기관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콘텐츠진흥원, 에너지기술 평가원, 산업기술 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진흥원, 연구재단, 인터넷진흥원, 저작권 위원회,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토지구획공사, 환경공단 나머지 기관*은 금년 중 통합완료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④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폐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인천항 부두관리 공사, 정리금융공사
⑤ 정원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9개 기관 (2.2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감축 완료

추진 현황	
⑥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 중 9개 기관의 기능조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나머지 11개 기관도 10~12년 중 완료 예정
⑦ 보수수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감사의 기본연봉 하향조정(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은 차관급(107,542천 원), 감사는 기관장의 80% 수준 ▪ 252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인하(평균 △15%)(09.2) ▪ 금융공기업(9개)의 기존직원 보수 삭감(△5% 이상)(09.12)
⑧ 복리후생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하향조정 ▪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용자로 전환 ▪ 주택대출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 ▪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지원을 폐지
⑨ 노사관계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항목(단체협약 내용 등)의 경영공시 의무화(09.3) ▪ 기관장 평가 시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항목(노사관계 협력 정도, 단체협약 합리성 여부 등) 반영(09.4)
⑩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 - 성과중심의 계량평가를 강화 * 평가지표 수 : (08) 30개 → (09) 27개 → (10) 20개 내외 ▪ 경영정보 공개 확대 등 경영공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공시 주기 단축, 공시항목 확대 등 * 공시항목 : (08) 27개 → (09) 33개 (단체협약정보 등 추가)

고용 없는 성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경제의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등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재정, 산업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U턴 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방안 강구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

*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의 진입·영업규제

완화, 보육서비스 개선 등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추진

*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 내실화 등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유도 등

○임금·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배은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Job mismatch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계획 혹은 실시 중인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예산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특히 mismatch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사업명	10년 예산	사업내용
취업 장려수당	3,880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도모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15,166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글로벌취업지원	25,121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마찰적 실업도 완화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19,712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디딤돌 일자리 창출	44,550	구직자에게 일정기간의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9,185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일반)106,548 (고보)69,933	청년의 민간기업에서 인턴과정을 통한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 배양으로 청년의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Job mismatch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인·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구인·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합니다.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하여 전산화하고,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기준 완화와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으로 구인수요도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 원,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 원 등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인턴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만 명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일보·기

업은행의 '청년취업 1만 명 프로젝트'와 같은 민간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성과·민간의 재정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수단을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경우,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안전망 확보 등 전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노무현 정부가 07년도에 달성한 수치(고용률 59.8%)를 고용목표로 잡는 것이 말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용률 목표*는 대내외 경제여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 추이가 향후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 시 설정한 고용률 목표

: 15년까지 위기이전 고용률(59.8%) 회복, 10년 이내 고용률 60% 달성

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②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

* 업종별 제조업 성장률(00~08) : (전체) 6.4, (섬유·가죽) △1.5 (전기·전자) 13.0

③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40대 대신 고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고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빈곤층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빈곤층 규모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입니다.

○빈곤층 규모는 정부의 보조금 등 현금이전과 누진적 조세 등이 반영된 가처분 소득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OECD 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09년 가처분 소득 기준의 빈곤층 규모는 15.2%, 257만 가구입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306만 가구보다 낮은 수치이나 지난해 빈곤층이 소폭 증가(15.0 → 15.2%)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빈곤층 증가는 가족해체, 생계형 범죄 증가 등 사회 병리현상을 초래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킵니다.

○이를 알기에 정부도 빈곤층 증가를 최소화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여 취업자를 늘려 빈곤층 증가를 최소화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빈곤층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음.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므로 동 세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사, 당해연도에 결손 또는 부담세액이 적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부분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중소기업 중 결손·무신고사업자 비중 : 법인사업자의 30% 개인사업자의 40%

□금번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은 고용주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도 월 100만 원 소득공제하는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예산지원 측면에서도 1인당 최고 180만 원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여러제도를 입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 취업 후 경과기간별 지원금액 : (1개월) 30만 원, (6개월) 50만 원, (12개월) 100만 원 등 최대 180만 원

**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해 ①취업성공실적에 따라 취업자가 6개월이상 근무 시 1인당 15만 원 지원, ②취업 전과정을 관리한 경우 1인당 5만 원 추가지원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층의 구직난 문제 등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임.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산업별 관계센터가 미반영된 구체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는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식정보보안 산업인력양성과정 등 전문 및 일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09년 지경부 고용계약형 석사과정(50명), 지식정보보안 산업인력 등(약 700명)

* 09년 방통위 사이버 침해센터 운영교육, 정보보호 실습교육, 정보보호 순회강연 등(약 6,000명)

□공공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보화예산에서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사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별 보안관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업체 기밀유출을 우려하는 기업의 통합보안관계 참여기피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미반영되었습니다.

- 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보보안 인력을 보강할 여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 ② 국가차원의 보안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①번 관련>

□정보보안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 장애인·여성 고용 등 유사고용관련 세제지원 요구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세제 운영 곤란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금년 2월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정보인력 보강에 대한 별도 세제지원은 곤란

<②번 관련>

□투자세액 공제 중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동일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다른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로 정상적인 세제 운영 곤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도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제지원은 곤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고급인력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건의가 많은데, 이에 대해 교과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실태조사, 용역보고, 관련 기업 등의 건의사항, 각종 통계지표 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학교육 과정과 생물·화학 전공 간의 밀접한 관련성(치의학은 공학 전공과 관련)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부생들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열기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학부전공 현황(09년)을 보면, 생물학 29.2%, 화학 11.4%, 공대 18.8%, 인문·사회 7.8%, 물리·통계·수학 2.3%였습니다.

※미국 의학입문검사(MCAT) 지원자 학부전공 현황 : 생물 62.6%, 물리 11.2%, 사회과학 10.3%, 보건 5.6%, 인문 3.5%, 수학 0.8%, 기타 6.1%

(출처 :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의학입문검사(MCAT) 응시자 분석, 1999)

○우리 부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의·치의학 교육제도개선위원회(09.6~10.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교수님들의 의전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전원 제도에 대한 이공계 교수 만족도 : 만족·매우만족 10%, 보통 41%, 불만·매우불만 49%(설문대상 350명, '의료인력 양성시스템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09.12)

○이공계 고급인력의 의학계 쏠림 현상은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저조하고,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서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대우가 의사 등 전문서비스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직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반성, 기초 학문 전공자에 대한 기업의 연구 투자 확대 및 기초 학문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학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는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활용 확대를 위하여,

- 신진연구자의 기초연구비 수혜율을 제고하고 (08년 275억→09년 400억→10년 621억 원)

-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인연금과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수여하고,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비율(PBS)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08년38%→09년53%→11년70%

- 또한 우수 연구원의 정년 연장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창의성 있는 미래기초과학핵심인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중점 지원하는 등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년 정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5% 증

액, GDP 대비 3.37%(08)

※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 (10년 신규) : 석·박사 20명 내외, 10억 원

대졸 인력공급은 많은데 이를 수용할 중소기업이 부족하거나,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련 현황(실태조사, 용역보고서, 각종 통계지표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졸자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수요에 비해 대졸자의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이며,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력 부족과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도 주된 원인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대학·전문대 졸업자의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유연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정책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전문대 졸업자 인력수급 전망 등 3건의 정책연구(09년)

-대학 스스로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학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조정, 캠퍼스 간 기능 조정,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

○또한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의 대학 참여 확대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실시(09년~), 대학·산업체 간 계약학과 운영(09년, 56교 200학과 6,569명), 대학교육 역량강화(10년, 85교 2,600억 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10년, 10교 300억 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10년, 18억 원 300명),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10년, 30억 원 500명)

○10.2월 노동부·중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홈페이지(Job Young)를 구축하여, 우리 부는 전문기고 및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구직희망자 정보(80만 개), 중기청·지경부 등은 우수 중소기업 정보(6만 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청년층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구인·구직 정보를 안내

하고, 특히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매칭 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미취업 대졸자 지원(Stay-in School) 사업 등을 통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을 해소하고자 우리 부는 노동부·중기청과 MOU를 체결(10.2)하였으며, 앞으로 TV, 주요 일간지, 옥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졸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부처 간 협의내용 및 추진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노동부·중기청 등과 MOU를 체결(10.2)하고 TV, 주요 일간지, 옥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과제임을 부각하기 위해, TV·라디오 등의 시사·교양·경제 프로그램 제작, 시사토론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주요 일간지를 통한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의 기고·칼럼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가, 청년 취업 우수사례, 고졸 이하 저학력 출신 또는 청소년의 창업 성공사례 등을 적극 발굴·홍보하는 등 청년층에게 능동적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보활동과 함께 맞춤형 취업 서비스(Job Young)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정보 및 청년 구직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제공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별(경영대, 법대, 이공대 등)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1인 및 소규모 창의적 기업, 벤처 기업 등과의 산·학 협력체제 구축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설치, 가족회사 운영 확대,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축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투자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규 및 제도, 공동연구, 교육·훈련, 기술사업화, 창업 등의 다양한 산학협력 지원체제를 갖추고 범부처적으로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실적증가 등 일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은 429개 대학 중 356개가 설치되었으며,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가족회사는 1단계(04~08)에서 10,043개 운영

○그러나 산학 간 자발적 협력이 부족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등 기업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일부 미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학의 유형을 연구중심대학형, 지역거점대학형, 전문대학·산업대학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해결, 수요지향 인력양성 등 현장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별도파일 제출] 2008년도 대학산학협력백서(PDF)

각 대학별 이공대, 자연대의 실험조교 현황 및 처우, 고용상 지위적 신분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학의 실험조교는 대부분 장학금 또는 기성회 재원을 이용하여 RA(Research Assistant), TA (Teaching Assistant)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 배정된 조교정원 중 일부를 실험조교로 배치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학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부에서 국립대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교에 한해 자체 조사 중인 현황자료를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과 사전협의를 통해 양해드린 바 있습니다.

[별도파일 제출] 국립대 조교 현황(엑셀)

각 대학별로 지역주민 등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대상, 프로그램, 취업연계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선호도(05, 직능원) : 공공훈련기관(21.2%), 대학(1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은 학령기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이 성인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10년 사업내용 : 예산 25억 원, 20여 개 대학 지원 예정(4월 중 선정)

-올해는 사업 선정평가 시 직업교육 강화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취업과의 연계를 유도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별도파일 제출] 대학의 평생교육 현황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교육 및 인력양성 TF」의 구성 및 회의내역, 안건 및 첨부서류 사본, 회의결과 내역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 및 인력양성 TF의 구성 및 회의결과 자료는 불임으로 첨부합니다.

[별도파일 제출] 회의 안건 사본 3건

<제1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개요>

□일 시 : 10.24.(목) 10:00~11:00

□장 소 : 교과부 중회의실(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15호)

□안 건

[안건1] 교육 및 인력양성 TF 구성·운영계획(교과부)

[안건2]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교과부)

[안건3]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노동부)

○주 재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단장)

□참석 대상

○참석자 :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

	부 처	성 명	직 위	비 고
TF 위원	청와대	진승호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총리실	김원득	교육노동정책관	
	기재부	이상원	인력정책과장	대 참
	교과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	
	문화부	문영호	문화여가정책과장	대 참
	지경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	
	복지부	노형욱	정책기획관	대 참
	환경부	이정섭	녹색환경정책관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	
	여성부	정봉협	여성정책국장	
	방통위	최재유	융합정책관	
	중기청	강시우	경영지원국장	
안전 관련부처	행안부	최승현	사회조직과장	대 참
	농식품부	정현출	경영조직과장	대 참
	국토해양부	도태호	건설정책관	
민간 전문가	직능원	장명희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이병욱	교수	

□식 순

구 분	시 간	담 당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00~10:05(5')	평생학습정책과장	
단장 인사말씀	10:05~10:10(4')	차 관	
안전 보고 및 토론	TF 구성·운영계획	10:10~10:20(15')	평생직업교육국장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10:20~10:40(20')	평생직업교육국장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10:40~10:55(15')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폐 회	10:55~11:00(1')	평생학습정책과장	

<제1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 개최결과>

□개 요

○일 시 : 10.24.(목) 10:00~11:00

○장 소 : 교과부 중회의실(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15호)

○참석자

-우리 부 : 제1차관(단장), 평생직업교육국장

-타부처 : 청와대·총리실·기재부·노동부 등

14개 관계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 2명

□논의 내용

【안전1】 「교육 및 인력양성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인력양성 TF와 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간에 안전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안건2】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관련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확대 등 부처 간 추 가협의를 거쳐 안건을 조정한 후 제2차 TF에서 계속 논의

○기술사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인력 미스매치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 제로서, 지경부 등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할 필요

【안건 3】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취업지원방 안」 관련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과 함께 “매칭”, 즉 취 업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향후 계획

○제2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 :

○참석자 :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

10.2.10.(수)

<제2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 개요>

□일 시 : 10.2.10.(수) 14:00~15:30

□장 소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부영상회의실 (1915호)

□안 건

[안건1]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교과부)

[안건2]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노동부)

[안건3]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방안 (교과부)

□참석 대상

○주 재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단장)

	부 처	성 명	직 위	비 고
TF 위원	청와대	진승호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이상원	인력정책과장	대 참
	교과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	
	문화부	박광무	문화예술국장	
	지경부	김남정	산업기술정책과장	대 참
	복지부	배병준	사회서비스선진화기획관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	
	여성부	정봉협	여성정책국장	
	방통위	장석영	정책총괄과장	대 참
	중기청	강시우	경영지원국장	
안건 관련부처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	
	국토해양부	도태호	건설정책관	
민간 전문가	직능원	장명희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이병욱	교수	

□식 순

구 분	시 간	담 당	비 고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14:05~14:25(20)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14:25~14:50(25)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중기청 별도자료 준비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시행	14:50~15:20(30)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상정안건 및 3월 TF 논의안건 확정	15:20~15:30(10)	전 체	

<제2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 개최결과>

- 개 요
 - 일 시 : 10.2.10.(수) 14:00~15:45
 - 장 소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부영상회의실 (1915호)
 - 참석자
 - 우리 부 : 제1차관(단장), 평생직업교육국장, 교육선진화정책관
 - 타부처 : 청와대·기재부·노동부 등 10개 관계부처 국·과장
 - 민간전문가 : 2명
 - 주요 협의사항
 - 【안건1】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관련
 -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확대 등과 관련하여 추가협의를 거쳐 안건내용을 합의한 후 국가고용전략회의 상정
 - 【안건2】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 관련
 - 부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현 내용대로 국가
 - 참석자 :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

고용전략회의 상정

- 【안건3】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방안」 관련
 - 기재부와 소요예산 등을 협의한 후 국가고용전략회의 상정
 - 향후 계획
 -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10. 2월 중
- <제3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 개요>
 - 일 시 : 10.3.11.(목) 16:00~17:00
 - 장 소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부영상회의실 (1915호)
 - 안 건
 - [안건1]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교과부)
 - [안건2]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방안(교과부)
 - [안건3] 교육 및 인력양성 TF 논의안건 확정 (공통)
 - 참석 대상
 - 주 재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단장)

	부 처	성 명	직 위	비 고
TF 위원	총리실	김원득	교육노동정책관	
	기재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교과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	
	문화부	박광무	문화예술국장	
	지경부	김남정	산업기술기반과장	대참
	복지부	유주현	일자리정책TF팀장	대참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	
	방통위	정석균	정책총괄과장	대참
	중기청	강시우	경영지원국장	
민간 전문가	한양여대	이정표	교수	
	명지대학	김현주	교수	

□식 순

구 분	시 간	담 당	비 고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16:05~16:15(10')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 방안	16:15~16:45(30')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TF 논의안건 확정	16:45~17:00(15')	전 체	

<제3차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 개최결과>

□개요

○일시 : 10.3.11.(목) 16:15~17:45

○장소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부영상회의실 (1915호)

○참석자

-우리부 : 제1차관(단장), 평생직업교육국장 · 전문대학정책과장

-타부처 : 총리실 · 기재부 · 노동부 등 9개 관계부처 국 · 과장

-민간전문가 : 2명

□주요 협의사항

【안건1】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관련

○원안과 같이 3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

【안건2】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방안」 관련

○국가자격제도 · 인턴십 및 일부학과의 수업연한 조정 문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체 수요를 대학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의 역량 강화방안을 함께 강구

□향후 계획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10. 3월 중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지자체 장이 참석하여 3.4.(목) 기 개최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우수한 보안관련 인력은 대학 학부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교과부와 대학의 입장차이, 대학 총원정량제와 수도권 소재대학총원제등에 묶여 수도권 대학 학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보안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대학측과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보안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대학의 학생정원은 당해 대학이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정원은 교과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우리 부에서

는 학부정원 증원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안관련 인력양성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의 자체정원 조정을 통해 보안관련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각 부처에서는 미스매치 해소를 공통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의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과 연계된 유연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과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대졸자들의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유연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학 스스로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학과 통 · 폐합, 학과 간 정원조정, 캠퍼스 간 기능 조정,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구조조정 실적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여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와의 연계 확대, 고교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실시(09년~), 대학 · 산업체 간 계약학과 운영(09년, 56교 200학과 6,569명), 대학교육 역량강화(10년, 85교 2,600억 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10년, 10교 300억 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10년, 18억 원 300명),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10년, 30억 원 500명)

○또한 10.2월 노동부 · 중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홈페이지(Job Young)를 구축하여, 우리 부는 전문계고 및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 구직희망자 정보(80만 개), 중기청 · 지경부 등은 우수 중소기업 정보(6만 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청년층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구인 · 구직 정보를 안내하고, 특히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매칭 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10년 154억 원), 미취업 대졸생 지원(Stay-in School) 사업(10년 79.2억 원) 등을 통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

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취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을 해소하고자 우리 부는 노동부·중기청과 MOU를 체결(10.2)하였으며, 앞으로 TV, 주요 일간지, 옥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부처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협의체 등 공식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교과부·노동부·중기청·기재부·지경부·문화부·국토부·복지부·여성부·행안부·금융위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TF에서 2018년까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수립 중(5월 중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교육 및 인력양성 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 부 주관으로 노동부·재정부·지경부·복지부·여성부·문화부·방통위·총리실·중기청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 또는 한 두 차례의 견학으로는 부족한데, 각 부처 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타부처와의 협력 방안 및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현재 기재부·노동부·중기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총리실, 교과부, 기재부,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여성부, 지경부, 환경부, 방통위, 중기청 등

○이 TF를 통해 여러 부처가 함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5월 중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촉진대책」, 11월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5개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

청소관련 사회적기업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노동부와 연계하여 동 기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동 사업에 투입된다면 진정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의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일선학교에서 지역내 자활사업단,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아 모든 학교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 추진시 노동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과 우선 연계하도록 함은 물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정규교원의 충원 문제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10학년도에는 유치원 교원 140명, 특수교원 361명, 보건교사 84명, 영양교사 52명, 사서교사 26명, 전문상담교사 104명 등 총 767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교원 확보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물으셨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교원 1인당 학생수

• 우리나라 : (초) 25.6 (중) 20.5 (고) 16.2

- OECD 평균 : (초) 16.0 (중) 13.2 (고)12.5 학령인구 감소로 계속 하향 추세
- ※OECD의 경우 학생수가 정체, 우리나라는

-09~30년 '교원 1인당 학생수'(현 초·중등교원 정원 동결시)

구분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초	학생수(천 명)	3,474	3,293	2,720	2,628	2,438	2,404
	교사(교과)수	145,932	145,932	145,932	145,932	145,932	145,932
	교사 1인당 학생수	23.8	22.6	18.6	18.0	16.7	16.5
중	학생수(천 명)	2,007	1,929	1,484	1,298	1,244	1,147
	교사(교과)수	96,522	96,522	96,522	96,522	96,522	96,522
	교사 1인당 학생수	20.8	20.0	15.4	13.5	12.9	11.9
고	학생수(천 명)	1,966	1,912	1,677	1,219	1,171	1,106
	교사(교과)수	112,771	112,771	112,771	112,771	112,771	112,771
	교사 1인당 학생수	17.4	17.0	14.9	10.8	10.4	9.8

향후 교과부의 교원인력 충원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부분을 고려하여 추후 『교원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전체 실업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나고 하시면서 노동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동부, 중기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해, 기업이 원하는 정도의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청년층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등이 대기업에 비해 미흡하다고 느껴, 대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등 노동인력의 미스매치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동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교과부·노동부·중기청·기재부·지경부·문화부·국토부·복지부·여성부·행안부·금융위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TF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의 하위 TF로서, 현재, 2018년까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금년 4~5월 중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09.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2월 노동부·중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홈페이지(Job Young)를 구축하여, 우리 부는 전문계고 및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 구직희망자 정보(80만 개), 중기청·지경부 등은 우수 중소기업 정보(6만 개)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청년층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구인·구직 정보를 안내하고, 특히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매칭 시스템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을 해소하고자 우리 부는 노동부·중기청과 MOU를 체결(10.2)하였으며, 앞으로 TV, 주요 일간지, 옥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어

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학이 사회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공급인력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 대학 구조조정 유도 및 탄력적 정원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지향형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교과목 및 학제 간 융합 교과목 개발 등을 지원하며,

※대학 교육과정 개발 지원(10년 22억 원, 50여 개 과제)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학생·학부모,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대학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금, 취업률 등 15개 영역 61개 세부항목 공개(08.12월 대학정보공시시스템 개통)

-대학 자체평가 실시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력수요에 부응한 대학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진단과 실태조사, 자체 구조조정 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고용률은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청은 0.98%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3% 이상(08.12.31까지는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지방직공무원과 교사의 채용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지방직공무원의 채용비율은 3%를 상회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는 모든 교육청의 장애인 채용률이 의무고용률(2%)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교원의 경우 07년도부터 의무고용을 추진하여 그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고, 장애인 임용대상자(대학에서의 양성인원 부족)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3% 미만으로 채용된 교육청(경북, 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제2항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인원 중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단계적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 비율이 3%를 넘을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며,

-교원의 경우는 장애인 임용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교대 및 사대에서 특례입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물부 장관 장태평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시군유통회사사업이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나 농협 등의 반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동 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유통회사는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산지수집상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 의령 : (08) 매출액 47억 원 → (09) 133억 원 (증 181%)

* 고흥 : (08) 마늘 산지가격1,400원/kg → (09) 1,500~1,650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시군유통회사 설립 초기 시 지역농협 등 기존 산지조직과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원물확보 애로 등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 등의 시군유통회사에 대한 참여(원물공급, 출자 등)가 확대되는 등 점차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유통회사가 지역의 핵심 마케팅주체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운영자금 보조(연 6.6억 원, 3년간), 원물확보 자금 융자(30억 원, 연리1% 3년 만기)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배은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중소SW기업 육성을 위한 SW분리발주제도를 타 부처에서도 적극 준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SW분리발주제도*는 도입초기(07)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고, 지금은 의무화 시행**(09) 초기 단계인 관계로 타 부처 등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 실적이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SW사업 추진 시 분리발주 대상 SW제품(1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000만 원 이상인 품질인증(GS 등) SW제품)을 별도로 계약해야 함.

** 국가(09.3) → 지자체(09.8) → 공공기관(09.12)

○그러나 의무화 시행(09)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공공부문 분리발주 적용률(%) : (07) 12.9% → (08) 21.0% → (09추정) 32.6%

○특히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발주 대상 SW제품을 GS인증제품* 등으로 명확히 지정·고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10.2)하였으며,

* SW 품질제고 및 유통촉진 위한 인증제도 (SW산업진흥법 제13조)로서 10.3월 현재 1,223개 제품 인증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10.2.26)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한 모니터링(10.5~)을 통해 SW분리발주 미준수 사례를 찾아 해당기관에 SW분리발주 준수를 권고하는 등 모든 공공기관이 SW분리발주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서는 기업자금을 투자·고용 확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투자·고용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금년도 기업들의 투자·고용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0대그룹 투자(전경련) : (09)74.8→(10)87조 원 (16.3%↑)

30대그룹 채용(전경련) : (09)72,866→(10)79,200명 (8.7%↑)

* 600대기업 투자(전경련) : (09)88.2→(10)103.2조 원 (17%↑)

○정부는 향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고용 등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 세제개편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09 : 10%→10:7%) 연장, R&D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분야 대기업 20%, 중기 30%)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설비·R&D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전기차 개발 등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게 신규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신성장동력 예산(지정부) : (09) 1.41조 원 → (10) 1.65조 원 (16.5% ↑)

*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 원 추가조성, 투자협력 지원단 운영 등

-특히 투자·고용 창출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과 함께 자금·기술개발·전문인력 등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겠습니다.

* 중기졸업기업 최저한세율 : (유예기간)7% → (유예후 1~3년)8% →(4~5년)9%→ 10%

* 일반 R&D세액공제 : (유예기간)25% →(유예후 1~3년)15% →(4~5년)10% → 3~6%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여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정체 문제는 중소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정부의 정책 등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내부역량 측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R&D는 조기상업화를 위한 단기과제 위주로 투자¹⁾됨에 따라 성장촉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에 필수적인 R&D, 경영혁신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역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²⁾ 등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1) R&D 자금 중 단기과제에 투자하는 금액 비중(08) : 54.0%

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 (00년) 71.3%

→ (07년) 65.4%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 전속성-영세성-내수의존성의 상호 악순환으로 인하여 수출비중이 감소¹⁾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²⁾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1) 전체 수출금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 : (04) 35.6 → (06) 32.0 → (08) 30.9

2) 자동차 생산 1만 대당 자동차부품 업체수 : (한, 07) 11.2, (일, 05) 8.9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경영안정 위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중견기업 정책의 부재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기 졸업 유예기간 해당사의 60%가 中企 복귀를 희망(06, 대한상의)

* 07년 현재 중견기업 중 113개사는 과거 7년

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경험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요건 및 지원정책 세부내역,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조세, 자금, R&D 등에서 총 160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1의 양적·질적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예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제도>

조 세	중기 적용 조세특례 지원(48개) 중 31개 지원제외·축소, 2개 세제부담 급증
자 금	중기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등 10개 정책자금 지원제외(중기청)
R&D	총 33개 사업에서 적용제외 또는 지원감소(중기청 20개, 지경부 12개, 농림부 1개)
판 로	총 24개 사업 중 22개 적용제외 또는 지원감소(중기청 16개, 지경부 6개)
인 력	총 16개 사업에서 적용제외(중기청 6개, 노동부 10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의 졸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졸업 유예기간과 함께 5년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두어, 부담완화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¹⁾·금융²⁾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입니다.

1)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2) 신·기보의 중기 졸업기업에 대한 보증 유지 및 가산보증료 단계적 인상, 장기설비투자·R&D자금 등에 대한 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등

-이와 함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하여 R&D, 전문인력, 글로벌 마

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부문에서의 노동시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09.6월 말 기준 국내 조선산업 고용인력은 약 16만 명, 이중 대형사 13만 6000명, 중소형 및 기자재업체 2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7개사는 풍부한 수주잔량, 회사채 발행, 원가절감, 사업다각화 등으로 당분간 유동성위기는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소조선사는 회사채발행 등 자구책 부족, 시설투자비용 과다(신생조선소), 신규수주 급감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09년 24개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09.1·3·6월, 상시)를 거쳐 10개사(C등급 8, D등급 2)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조선기자재업체들도 조선사 발주물량 감소, 납품단가 인하, 결제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부문 고용인력은 현재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으나 업황악화로 인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바, 근로기준법* 적용 및 파견·사내하도급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사업이 여

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9년도 조선업종 임금체불통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 원)

구 분	발 생			처 리			처리 중
	계	신 규	이 월	총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사업장수	888	885	3	855	530	325	56
건 수	1,979	1,964	15	1,789	1,124	665	228
근로자수	6,095	5,869	226	5,462	3,111	2,351	633
체불금액	26,279	23,295	2,984	23,786	13,086	10,701	2,493

(자료 :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기준과)

○우리 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09년 2차례(4월, 11월)에 걸쳐 조선산업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황악화에 따른 중소조선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중소조선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기 대책에는 부실조선사 구조조정 외에도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배은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기본요건 중 'R&D 상시연구인력 고용'을 없애는 등의 계획은 부적절해 보이며, 인력 관련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본요건의 완화는 소규모 투자라도 국내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R&D 분야 상시연구인력'은 5명이상 고용토록 하였습니다.

* R&D분야 상시연구인력 고용요건 : (개정 전) 10명이상 →(당초개정안) 1명이상 →(개정 후) 5명이상 (2.19, 법안소위 심사시 배은희 위원님 의견 반영)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대규모 공장설립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고충처리 지원 강화 등 외국인투자기업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①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R&D예산은 증가시킨 반면 중소기업 지원되는 HRD예산은 축소된 이유, ② 민간 고용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③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 OECD국가들의 중견기업 비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①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R&D예산은 증가시킨 반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는 HRD 예산은 축소된 이유

○정부는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08년에는 세계 8번째로 정부 R&D 투자 1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R&D분야 재정투자 추이 및 증가율 (억 원, %) : (03) 65,154(6.1) → (04) 70,827(8.7) → (05) 77,996(10.1) → (06) 89,096(14.2) → (07) 97,629(9.6) → (08) 109,936(11.2)

○특히 정부 R&D투자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규모별 정부 R&D 지원규모 및 비중(08

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보고서)

: (대기업) 9,627억 원(8.8%), (중소기업) 1조 1,787억 원(10.7%), (출연연 등 기타) 80.5%

<정부R&D 대비 중소기업 지원 R&D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정 부 R&D (A)	89,096	97,629	109,936	123,437
중기지원 R&D (B)	9,250	10,148	11,787	-
중기지원 비율(B/A)	10.6%	10.6%	10.7%	-

○정부는 R&D투자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민간 고용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고용비중은 88.4%(1,115만 명)입니다.

③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④ OECD국가들의 중견기업 비중

○현재 입수 가능한 통계는 제조업 사업체 기준의 미국, 일본 통계로서, 전체 사업체 중 중견기업체(중업원 수 300~999인) 비중(05년 기준)이 미국 2.4%, 일본 1.0%입니다.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① 교과부와 지경부 각 부처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및 실적, 예산 ②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협의체 등의 협의기구 구성의향 ③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력방안 및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① 지식경제부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및 실적, 예산

○산업기술 R&D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4대 산업원천기술분야를 건인할 R&D 고급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전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원 실험실과

기업 간 R&D기반의 산학 컨소시엄 구축((09) 42억 원, (10) 41억 원)

* 09 : 38개 컨소시엄에 실험실 108개, 기업 134개 참여

• 대학 IT전공역량 강화(NEXT)사업을 통해 IT교육품질을 제고하고 공학교육인증 확산 유도((09) 168.5억 원, (10) 88.5억 원)

* 08 : 66개 대학 133개 학과, 09 : 65개 대학 127개 학과

• 기후변화 등 에너지환경변화 대응과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 및 특성화대학원 개 설을 통하여 석·박사인력 육성((09) 141억 원, (10) 178억 원)

* 09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3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 7개 등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체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성화된 산학협력대학 육성(산학협력중심대학 17개((09) 180억 원, (10) 180억 원)

• IT산업체 전문가(멘토)가 IT전공 대학생(멘티)의 실습과제를 지도하는 산학협업 IT멘토링 제도 활성화 지원((09) 16억 원, (10) 66억 원)

* 멘토 (08) 1,412명→ (09) 1,960명, 멘티 (08) 3,818명→ (09) 3,966명

○또한 석·박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우수인재의 인턴십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에서 1,100여 명의 석·박사인력을 고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09) 160억 원, (10) 160억 원)
- 기존 인턴십에 사전교육과 채용지원을 추가한 고용연계형 New-IT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완화 기여(593명 채용)((09) 2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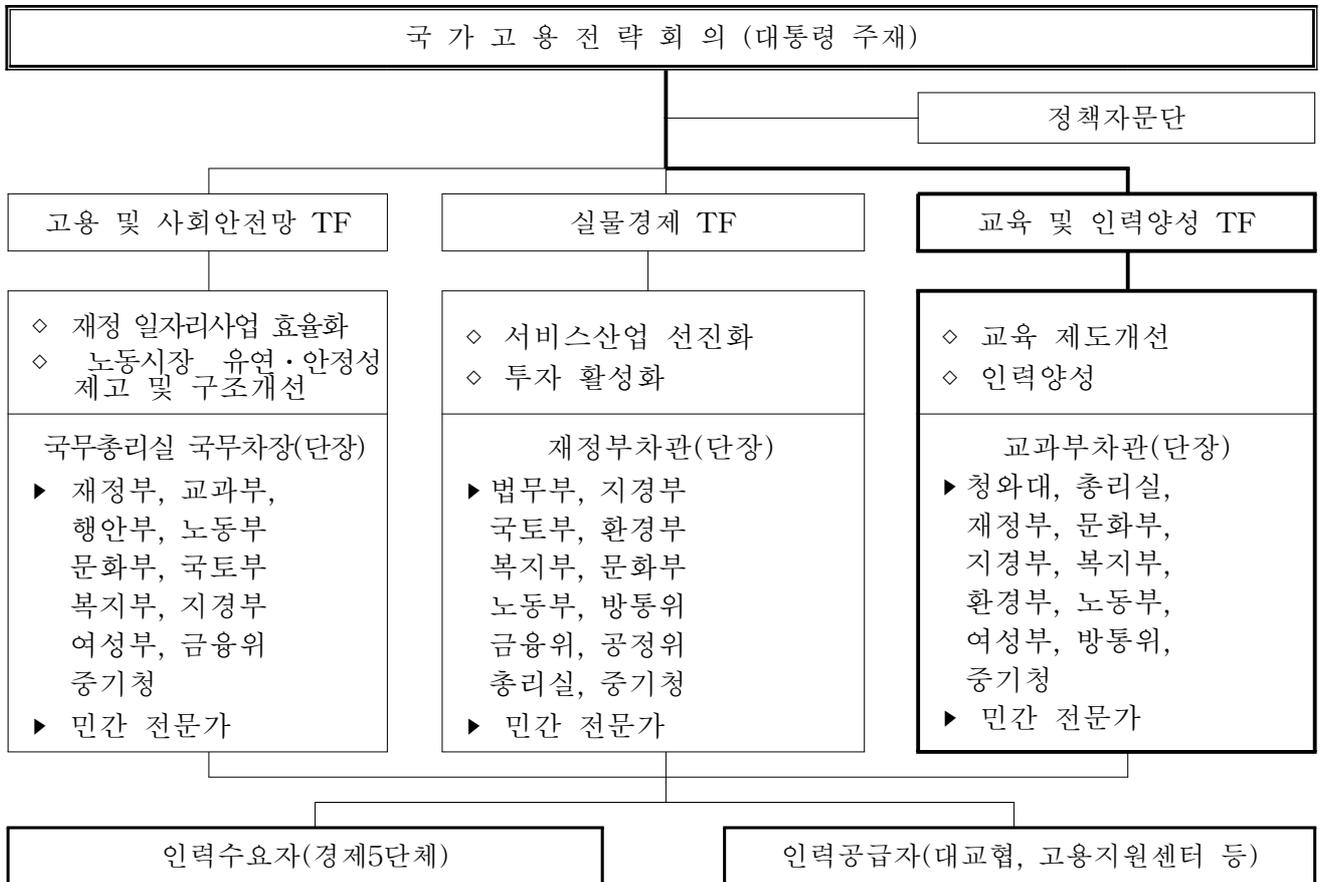
②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향

○현재 지경부, 노동부, 교과부 3개 부처 공동으로 23개 주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Sector Council)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 주요 산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구성 및 지원 근거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촉진 등)

○또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3개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력방안 및 대안

○동 문제에 대해 국가고용전략회의 하부의 3개 TF를 통해 범부처적인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 교육 및 인력양성 TF 논의 예정 의제
 -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촉진대책(중기청),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교과부),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노동부) 등

위원님께서 ① 중소기업 지원책의 종류,

② 중견기업 육성방안 발표 이전에 중견기업이 받았던 지원책 종류, ③ 중견기업 육성방안 발표 후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 종류, ④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하도급 대급지급 의무기간, 세액감면 기간 연장 등이 대책에서 제외된 이유, ⑤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성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① 중소기업 지원책의 종류
○그간 정부, 학계, 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만 지원되거나 중소기업을 우대하

는 제도가 조세, 자금, R&D 등의 분야에서 총 1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조세(48개), 자금(10개), R&D(24개), 인력(16개) 등

② 중견기업 육성방안 발표 이전에 중견기업이 받았던 지원책 종류

○중견기업 육성방안 발표 이전 중견기업은 대기업 집단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으로 간주되어,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③ 중견기업 육성방안 발표 후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의 종류

○우선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부담완화기간(5년간) 동안에는 최저한세·R&D세액공제·가업상속 등 조세지원과 함께 국책은행 거래관계 유지·보증·무역금융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금, R&D, 전문인력, 글로벌 마케팅 등 중견기업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④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기간, 세액감면 기간 연장 등이 대책에서 제외된 이유

○정부는 금번 중견기업 육성 대책 수립 시 중소기업 정책과 같이 경제적 배려 차원의 경영안정 지원은 최대한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과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저숙련 단순 생산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고용허용,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의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기간 적용, 기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 등은 경영부담 완화 차원의 정책으로서 성장촉진 효과는 낮다는 점에서 대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⑤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성 방안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으나, 향후 기업현장의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추가 도입할 정책이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① 공공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산업별 관제센터 미실시 사유
② 보안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① 공공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산업별 관제센터 미실시 사유

○‘공공기관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 및 ‘산업별 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되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별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경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10년 20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해 11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산업별 보안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에서 기밀보호 등의 문제로 보안관제를 기피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보안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확대 필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보안투자 장려를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R&D 설비투자 10%, 에너지절약시설 설비투자 20%,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투자 최대 30% 조세감면을 적용

○우리 부는 작년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대책 TF 회의 시 정보보안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3%→ 10% 이상)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에 보안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홍희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른 구조조정과 원자력공기업 정원 확대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자력 공기업은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원전 수출산업화 등에 필요한 핵심 인력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원자력 공기업은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원 감축 규모(09년) : 한수원 1,067명, KOPEC 195명, KPS 460명, KNF 41명

○다만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원전 수출산업화, 미자립 기술 조기 개발 등을 위해 원자력

공기업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계 부처와 함께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원자력공기업 정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경부-기재부-원자력공기업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딜로이트-안진)에 통해 조직진단(09. 10~10. 2)을 기실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추진상황
- ① 비행훈련사업자로 선정된 한서대와 항공대의 사업비 부담액
 - ② 울진공항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공사의 진행 과정
 - ③ 학생선발, 교육과정, 훈련기 도입, 교관 채용 등 개원 준비 상황
 - ④ 공군과 해군의 훈련공역 확보에 대한 합의 진행 상황

①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09~13년간 한서대, 항공대는 각각 10년도 5억 원, 11~13년 매년 2.5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분(매년 20억 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사업자별 투자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한서대	5억	2.5억	2.5억	2.5억	2.5억	15억
항공대	5억	2.5억	2.5억	2.5억	2.5억	15억

※사업기간 : 2010년~2014년. 단, 2014년도는 정부지원금 지급 안됨.

② 울진공항 터미널 잔여공사, 유도로 및 계류장 확장공사는 10년 6월 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잔여공사는 2.8일 착공하였으며, 유도로 및 계류장 확장 공사는 현재 건축공사 계약·발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3.24일 착공하여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③ 3월 초부터 훈련기 도입, 교관 채용 등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4월부터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4월 초 제1기 조종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여 5월 중 선발하고, 6월부터 학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7월 훈련원 개원 후에는 울진에서 본격적인 비행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훈련사업자는 교육생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연내 순차적으로 학과교관과 비행교관을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규모는 훈련사업자별로 26~27명 예상됩니다.

④ 10.1월 국방부(공군, 해군)와 접근관계구역 조정, 훈련공역 설정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10.3월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5월 공역신설 및 조정안에 대한 항공정보간행물(AIP)상 고시(7.2일 발효기준)를 요청하여 비행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분문의 고용현황 및 대책

1. 10.2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9.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286.7만 명)의 7.0% 차지하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은 공공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취업자 수 : (09.2) 168.1만 명 → (10.2) 159.5만 명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용 잠재력*이 높은 건설분야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단위 : 명/10억 원, 07년)
 • (건설) 16.8 > (운수·보관) 14.4 > (전 산업) 13.9 > (제조) 9.2

【건설분야 고용대책】

① 공공 건설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09년에 이어 10년에도 SOC 예산(23.7조 원)의 66%인 15.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업 투자규모를 확대((09) 7.2→(10) 9.8조 원)하고, BTL 등 민간자유치도 적극 추진(2.5조 원)할 계획입니다.

②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상한액 산정 시 실제 투입비용(제세공과금, 금융비용)을 감안,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10.3)하였으며,

-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 택지(전체 주택의 25% 수준)를 차질없이 공급(10년 하반기)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을 활성화(대한주택보증 시범사업, 0.5조 원 규모)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펀드·리츠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환매조건부 10년 중 5000억 매입

○아울러 6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장인 중동·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신흥 자원부국에 대한 신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 시장개척단 파견, 로드쇼 개최 등 민·관 합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자원개발과 연계한 인프라건설, 해외도시개발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10년 4000억 목표)하여 금융지원

2. 4대강 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하기 바람

1.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표 및 관련 계수를 사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약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로서 국토부 사업만 볼 경우 4대강 사업 기간 내 약 2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타 산업분야에 유발되는 간접취업유발 효과를 포함한 수치로서 국토부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약 23만 개 중 직접적인 효과는 14만 개, 간접적인 효과는 9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분리발주 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나, 국토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분리발주를 철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의견과 향후 정책방향은?

○정부가 09.3월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시공단계에서의 인위적인 칸막이 규제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지, 분리발주제도를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저희 국토해양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금액 추이

- (08년) 5,469억 원 ⇒ (09년) 8,714억 원 ⇒ (10년) 1조 원 수준

○다만 분리발주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등에서는 공사 효율성 저하,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도 우려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설업체의 대부분(전체의 99.7%)은 중소기업임.

-09년, 전체 건설업체(57,000개) 중 대기업 0.27%(152개), 중기업 1.31%(747개), 소기업 98.42%(56,101)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해외수주 전문인력 정부차원에서 양성 필요

① 공항, 항만물류 등 각 분야별로 해외수주 전문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국부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및 견해는?

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07년부터 해외건설수주액이 400억 불을 상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08년부터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08.7월부터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4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10.3월까지 1,689명을 양성

○인력양성사업 확대개편을 통해 현재 플랜트, 토목, 건축중심의 교육을 세분화하여 공항, 철도, 항만 등 사업별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박람회, 해외건설인력 인력풀제 운용 등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증가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4대강 사업 관련

①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

②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로 건설투자 1조 원 당 일자리는 2,149~3,838개에 불과하고, 이를 4대강 사업에 적용하면 4만 7000~8만 5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

③ 취업계수의 단순적용은 곤란, 산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에 따른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데 4대강 사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동안 직·간접적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22조 원 중 보상비 제외 19.4조 원) × 06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 원) = 약 34만 명

②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성명서에서 주장한 건설투자 1조 원 당 일자리 개수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자료로 성명서에서도 어떤 통계를 사용하였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③ 4대강 사업은 다기능보와 같은 대규모 사업부터 환경부의 마을하수관거 개선과 같은 소규모 사업까지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는데 논리적인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태하천 조성, 호안공사, 조경공사 등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후반 공정들이 진행되면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1.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1.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표 및 관련 계수를 사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4대강 사업으로 약 34만 개, 그 중 국토부 사업을 통해 2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의 초기단계이나 모든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금년 하반기 경부터는 고용 창출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2.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이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10억 원만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적 취업유발인원은 2006년 기준으로 17.3명, 2007년 기준으로는 16.8명입니다.

○지난 09년 우리 부 SOC예산은 2008년에 비해 약 42,516억 원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취업유발계수(16.8명/10억 원)에 적용해 보면,

-09년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유관산업에서 신규 창출된 취업자 수는 약 7만 명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① 2010년 공기업 투자는 9조 8000억인데 반해 민자유치는 2조 5000억 원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② 민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특단의 조치 필요

① 정부재정 보완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여건 악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투자확대 필요성, 장래 재정부담, 통행료 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유동성 지원, 적격성 조사기간 단축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민자사업의 리스크 완화, 투자여건 개선, 사업준비기간 단축 등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마련(09년 2월, 8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윤석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청년인턴제가 실제 채용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해 주기 바라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홍보 강화, 지역별/테마별 취업박람회 개최, 지방구직자와 연고기업 간 구직연결 등 일자리 관련 중기청의 추진 노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턴 경력이 실제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노동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규직 취업을 위한 우량 중소기업 발굴, 교육훈련 강화, 민간 전문기관의 매칭기능 활성화 등 실질적 취업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해 언론·방송매체 등과 공동으로 10. 4월부터 정부가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 및 성공 CEO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기업인 발굴·소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모범 사례 홍보 등(노동부, 중기청, 교과부)

○이공계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3000명)하고 CEO강좌(30개 대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과 비전을 체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지방구직자와 연고기업의 구직연결을 위한 교육청,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취업대책반을 운영하여 ‘지역별·테마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 하고

* 지방중기청별로 구인-구직만남의 장을 분기별 1회 개최(10.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중소기업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매월 1회 추진 예정

(정희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중기청의 벤처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

소기업청은 지난 11월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대책’ 주요내용 별첨

○금년 중에 추가적인 벤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첨 부>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대책’ 주요내용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

○YES 리더 특강을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명품강좌로 정착

* 선도 중소·벤처기업, 사회공헌 활동 우수기업의 대표 등이 창업도전기·기업경영철학을 강의(연중수시, 10만 명)

○「1사 1꿈나무 펀드」를 통하여 청년층의 모의창업 지원

* 민간기업·개인 등이 소액기부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대학생 등의 모의창업을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 비용 등 300만 원 내외)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지원

* 지역예선 및 본선을 거쳐 대상별(학생부, 일반부)·업종별로 총 40개 팀을 선정하여 창업실무교육 및 사업화자금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 등 중점지원 분야의 지원한도를 높이고 대학생은 사업참여 시 납부하는 현금부담을 50% 감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

* 아이디어상업화센터를 추가 지정(문화콘텐츠진흥원 등)하여 제조업부터 지식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600명)

□녹색 등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12년까지 모태펀드를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3.5조 원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결성

* 모태펀드 조성계획(조 원) : (09) 1 → (10) 1.2 → (11) 1.4 → (12) 1.6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창업전문펀드 결성

* 대학생 등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100억 원), BI-프리보드 연계펀드(100억 원) 등

○신성장·녹색, 부품소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투자 지원

* 신성장 분야(3개 분야 16개 산업) : 녹색기술 산업(6개), 첨단융합산업(6개), 고부가서비스산업(4개, 녹색금융 제외)

□신성장 동력분야 벤처기업 발굴·육성

○공급사슬(Supply Chain) 분석을 통한 녹색벤처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대책 마련

○‘문화콘텐츠분야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문광부 공동)

* 문화콘텐츠분야 정책자금 평가지표 개선, 관련부처 공동 문화콘텐츠분야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

○‘농·공·상 연계형 BT벤처’ 육성 추진(농식품부 공동)

* 농수산물 고부가가치형 ‘2·3세대 제품 100개’ 개발, BT벤처의 창업 및 사업화, 내수시장 판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사업전환 유도

* 신성장 업종별 구조고도화 전략 마련 및 사업전환 기본모델 개발 등

□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공급체제 마련

○벤처협회가 벤처기업의 수요를 받아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후 교육훈련 시범 실시

○대학 재학 시 학자금을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Venture Scholarship 제도’ 도입 검토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민간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첨단기술 보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민간 해외네트워크 : INKE(24개국 35개 지부), OKTA(60개국 108개 지부), 코리아벤처갤러리(5개)

○‘해외상장 지원협의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NASDAQ, CHASDAQ 등) 상장 지원

○미국 SBIR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현지 컨설팅 회사를 통해 기술·사업성 평가, 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벤처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신생벤처의 기술혁신역량과 선도벤처의 시장 확보 역량을 결합하는 벤처상생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벤처촉진지구(25개)를 활성화하여 지방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벤처촉진지구 입주업체·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활성화방안 마련,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종 간 교류회 구성·운영

□재창업 지원제도 도입 및 연대보증제도 완화

○중진공에 재창업 자금을 신설(200억 원)하여, 고의성이 없는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 중진공-신복위와 공동으로 평가팀 구성 및 신용회복 지원, 재창업시 최고 10억 원 지원

○중진공 연대입보 기준 완화 및 면제방안 검토

*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하거나, 주식옵션 등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

(최영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절차 간소화·규제완화 등 과거에 취했던 조치가 아닌, 일정 요건(예 : 고용인원, 생존연한 등)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획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설립 비용 및 창업초기기업의 비용부담완화, 대학發 기술창업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제공시스템인 Biz-Info 사이트가 너무 복잡하여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 애로가 있으므로, 비즈인포(Biz-Info)에서 정부의 정책정보 전부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Bizinfo시스템을 통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경영·행사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제공대상 기관 및 사업수가 제한되고 각 기관에서 생성한 정책정보를 단순 등록·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맞춤형 정책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제공되는 정책정보 대상기관(197개→300개) 및 사업 수를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검색지원 기능 보강, 핵심 주제를 통한 키워드 검색 기능 신설 등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정보 활용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편방안 주요내용(안)

- (수집단계) 정보누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생성기관의 정보망과 비즈인포 자동취합 기능을 일제 점검
- (가공단계) 중요도에 따른 정보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제공정보의 특성에 따라 단위지원사업(120개) 중심 재분류 제공
 - * 예시 : 자금(대분류) ⇒ 정책자금(중분류) ⇒ 창업지원자금(단위사업)
- (제공단계) 검색어(키워드) 방식이외에 맞춤형 최신정보 서비스도 포함하고 일자리·성장동력분야는 핫이슈난에 기획홍보
 - * 키워드검색 고도화를 위해 DB구조 개선 및 검색엔진 기능강화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과 인력채용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 여건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수 중소기업DB 구축, 지역별 취업대책반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해 언론·방송매체 등과 공동으로 10. 4월부터 정부가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 및 성공 CEO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기업인 발굴·소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모범 사례 홍보 등(노동부, 중기청, 교과부)

○이공계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3000명)하고 CEO강좌(30개 대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과 비전을 체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등 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고 있으며,

* 지방기업 가점 내역 : 산업기능요원제도(5~10점), 인력채용패키지사업(2점)

○앞으로도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 시행 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고용과 관련된 지원혜택 현황과 고용 지원과 관련된 지역센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개발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 일자리 창출 기업 정책자금 우대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기업평가 등급 최고 2단계 상향)

*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 우대 지원(인건비 100% 현금지원)

* 산업기능요원 :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 부여 (최대 10점)

□또한 중기청은 11개 지방중기청에 취업지원관을 지정하여 취업 등 인력 사업을 전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창의적 아이템 상용화 관련하여(예 : 아이폰의 앱스토어 등) 1인 기업, 소기업 등이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제도적 제약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최초 지식경제부 소관 서면질의서로 분류되었으나, 부처 간 및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청 서면답변자료에 포함시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이폰 앱스토어 등장은 창의적인 1인 기업 등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등록할 경우 게임물등급분류 심사시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으로 적기출시·판매가 곤란한 실정이며,

*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 4개월 미만, 등급분류 심사기간 : 15일 이상

○미국 등은 공공정보를 전면 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크게 활기를 띠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분야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등을 활성화기 위해 범정부적 제도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문화부, 방통위, 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공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제고를 추진 중에 있고,

○문화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게임의 경우 사전등급분류심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행) 사전등급분류심사 필수(15일 이상) → (개선) 심사면제

□이외에도 앱스토어 등 새로운 환경하에서 1인 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최근의 창업부진 현상의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최초 지식경제부 소관 서면질의서로 분류되었으나, 부처 간 및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청 서면답변자료에 포함시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02년 이후 창업이 위축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 창업기업 수(천 개) : (00) 482 → (02) 612 → (04) 427 → (06) 438 → (07) 377

○창업의 위축은 기업가정신의 약화, 수익성 높은 아이템 발굴의 어려움, 실패 후 재기 곤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기업가정신 지수(한국은행) : (00) 53.2 → (02) 10.0 → (04) 17.5 → (06) 18.6 → (07) 18.0

* CEO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사업실패 시 신용불량자로 전락 등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그간 5차례에 걸친 창업 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창업절차 간소화(08.4), 기술창업 활성화·보완대책(08.6, 11), 1인 창조기업 활성화(09.3),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대책(09.11)

○정부의 노력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09년신설법인 수가 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창업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설법인수(개) : (03) 52,739 → (05) 52,587 → (07) 53,483 → (09) 56,830

□앞으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청장 이인실

(김성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고용통계 세부 항목 중 1998년 이후 신설, 폐지, 개편된 항목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설, 폐지, 개편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연도	구분	문항	사유(목적)
99.11	신설	16. 추가취업가능시기	추가취업희망자 상세히 파악
	신설	17. 지난주 구직여부	추가취업희망자 상세히 파악
	변경	23. 지난주에 구직 희망여부	구직단념자 파악
	변경	27. 구직활동 빈도	구직단념자의 형태 파악
03.01	변경	7. 지난주 주된 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 활동 상세 파악
	신설	12. 부업여부	취업시간 구분(주업, 부업 구분)
	신설	23. 취업제의 여부	실업자에 대한 취업제의 여부 파악
	신설	34. 현 직장 취업시기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 파악
	신설	35. 고용계약여부 및 기간	종사상지위 구분

연도	구분	문항	사유(목적)
03.01	폐지	27. 구직활동 빈도(구직단념자)	응답항목의 유의미성이 낮으며 활용도가 낮음
08.01	변경	18. 구직방법	18-1구직경로, 18-2구직방법으로 분리
	폐지	22.원하는 일의 형태	응답이 일관되어 유의미성이 낮으며 활용도 낮음
	폐지	23. 취업제의 여부	응답이 일관되어 유의미성이 낮으며 활용도 낮음
	폐지	24. 비 취업사유	소수의 응답으로 분석 활용도 낮음

위원님께서 고용통계와 관련하여 특정 계층의 직업이동 및 임금·소득·자산의 계층별 이동에 대한 패널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와 통계청이 시행 중인 지표,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구두질의) 패널조사와 연관되어서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장애인고용패널(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교육고용패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있음.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SLID, 통계청), 미국(NLS, 센서스국), 호주(HILDA, 통계청) 등에서 노동관련 패널조사를 하고 있음.

*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통계청은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 별도의 노동관련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반화된 고용패널을 구축하여, 기존 패널조사를 효율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가구패널조사를 통해 소득, 노동시장, 가족 등 다양한 부문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정책의 효과 등을 측정하고 있음.

□반면 국내패널은 정책수립이나 방향 결정에 필요한 항목이 부족하여 자료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내패널도 사회구조의 변화, 계층별

이동 및 정부정책의 효과분석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패널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향후 고용통계 확충계획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통계의 개발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체규모별 취업자 공표

-사업체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중·소규모*별 취업자 지표 공표(10.1분기)

* 대(300인 이상), 중(5~299인), 소(1~4인)

○고용의 질 측정 지표 개발·시산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을 고려한 지표 개발 및 시산(10년 말)

* UNECE/ILO 주관으로 현재 지표개발을 추진 중이며, 유럽 주요국들은 지표(안)를 바탕으로 시산작업 진행 중임.

□지자체 일자리 창출 정책지원을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확대검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수립 지원과 자치단체장 고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확대 (연간 1회→ 4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임.

-그러나 분기별 고용조사는 상시조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기관 간 협의해 나가겠음.

(정진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통계청 고용통계의 신뢰성 회복방안 및 다양한 보조지표 개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용자 및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개발·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계획임.

○사업체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대·중·소규모*별 취업자 지표 공표(10. 1분기)

* 대(300인 이상), 중(5~299인), 소(1~4인)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시산(10년 말)

○지자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고용조사 주기 확대 검토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모집단 파악을 위해 전국사업체 조사에 비정규직 규모파악 문항 추가(10. 6월)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 대한 세부 실태 파악을 위해 일자리의 산업 및 고용형태 세분 조사(10. 5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장소별(사업장, 야외 작업현장, 운송수단 등) 규모파악을 위한 항목 개선(10. 8월)

□주관적 고용사정을 반영한 실업률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선행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표체계의 객관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임.

위원님께서는 통계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관리되어 효율성이 떨어져 통계청의 통합 관리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산발적인 통계 작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9년 10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국가통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통계 전체 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중이며,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국가통계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또한 매년 승인통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있고,

○통계 조사 조직이 열악한 타 부처의 통계조사를 통계청이 대행하는 통계 대행제도를 확대하

고 있으며,

○국가 통계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통계조사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통계조사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김용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정부 실업률 통계와 실제 고용상황과의 괴리 및 실업통계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견해, 새로운 지표 개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부 언론의 유사실업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는 과장된 면이 있음.

○“쉬었음” 인구는 은퇴·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어 쉬는 사람(82.0%)과 “18시간미만 취업자” 중에는 육아나 가사 등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8시간미만 근무하는 사람(83.8%)이 대부분이며,

○또한 당장 취업의사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취업준비자” (94.7%)를 모두 합산하여 사실상 백수로 분류하는 것은 과장임.

□통계청은 유사실업자 관련 주요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식지표와 체감간 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외에도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보조지표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에서 발표한 정책대상 규모로서의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한 유사실업에 대한 고용보조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있음.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선행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표체계의 객관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임.